

충청남도 농지·농업경영체·농업 지원정책 종합 실태분석 연구

강마야(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maya@cni.re.kr)
최돈정(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jjolddagoo@cni.re.kr)
손성규(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원, ssk95@cni.re.kr)

- * 자문 및 자료제공 협조해주신 분(가나다 순 배열)
-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지원연구부 연구위원)
- 전량배((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서산시 OO마을이장)
- 조병옥(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 함안군 OO마을이장)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및 식량원예과 관련 업무 담당자

이번 연구는 충청남도의 농지, 농업경영체, 주요 농업 지원 정책(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민수당) 등 3가지 요소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사각지대 지점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CONTENTS

- 1. 서론
- 2. 농지소유 정보 실태분석
- 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태분석
- 4. 농업 지원정책 실태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 부록1. 충남 정책지도 2022-08호(농지)
- 부록2. 충남 정책지도 2022-09호(농업경영체)
- 부록3. 서면자문의견

요약

- 농지소유 정보 실태분석
 - 2022년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는 1,703,514건, 농지면적은 246,236.4ha
 - 충청남도 내 전체 필지 중 농지 필지 수는 45.9%, 농지면적은 29.9%
 - 소유주체별로 개인소유는 79.6%, 국유지는 5.7%, 공유지는 8.5%, 기타 6.2%
 - 연령대별로 50대 미만은 10.5%에 불과, 60대 이상은 69.2% 차지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남 농지 필지 비중은 30.4%, 충남 농지지가 비중은 28.2% 차지,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태분석
 - 2022년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는 199,983명, 농업경영체(경영주 외 농업인)는 91,023명, 이 중 공동경영주는 5.0%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평균 연령은 68세로서 연령대별로 50대 이하는 22.4%, 60대~70대는 57.3%, 80대 이상은 20.3%
 - 전업겸업별로 전업 형태는 74.9%, 겸업 형태는 25.1% 차지
 -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지 필지 수는 1,003,527건, 실제 경작면적은 195,788.9ha
 -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는 923,247건, 185,358명으로서 92%인 것으로 분석
 -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지 중 자경은 58.8%, 임차는 39.8%, 자경과 임차 혼합은 1.4%인 것으로 분석
 - 관외 거주하는 충남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면적은 8.9% 차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순
- 농업 지원정책 실태분석
 -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62,459명, 지급면적은 165,660ha, 지급액은 348,047백만 원(서산시 12.8%, 당진시 11.6%, 논산시 8.4%)
 - 1인당 공익직불금은 214만 원, ha당 공익직불금은 210만 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159,846호, 지급액은 127,874백만 원(서산시 9.3%, 당진시 8.8%, 논산시 8.3%), 호당 지급액은 80만 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간 차이는 40,137명(전체 대비 79.9% 지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간 차이는 37,524명(전체 대비 81.2% 지원)
 - 농지는 67.3%만이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왜 농지, 농민을 소환하게 되었는가?

<국가 측면의 농지, 농민 이슈>

- 농지 이슈 : 1987년 개정된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경자유전)”는 게 기본 원칙, 이는 농지가 자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보전을 통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하지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늘어나면서 2021년 임차농지 비중이 50%(통계청, 농가경제조사)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이 이미 많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 농민 이슈 : 농지를 기반으로 하여 농사를 짓는 자인 ‘농민’은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름인 반면, 최소한의 농지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농업경영체’만이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임.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나 농어민수당 등의 정책대상자 자격기준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만이 가능하기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빈틈) 발생 중
- 결과 : 농업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와 농민(사람)은 법과 제도 상에서 놓치고 있는 공백으로 인하여 부재지주 문제, 가짜농업인 문제 등 발생, 특히 연령대별 농지 이용 현황 및 농업경영체 등록 차이가 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 필요

<충남 측면의 민선 8기 농정방향 이슈>

- 민선 8기 충청남도 농정의 기본 방향은 ‘젊고 힘있는 농업’으로 이는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ICT 융복합 농업기반구축, 농업인 경영이양 촉진, 농촌구조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하는 사항 포함
- 이를 위해 그간 디지털화되지 못하고 현황 파악, 행정 사료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존재하던 농업 및 농업경영체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간기반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은 충남 농정 미래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정보 인식 필요
-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계성 정보가 아닌, 농정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지

방자치 활성화 등의 의사결정 시 충청남도의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치있는 증거로 활용성이 높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구축, 갱신하고 활용성을 제고하는 노력 필요

- 충청남도의 농업인력 부문에서 미래성장 동력창출 한계 봉착, 신성장동력 창출할 만한 농어업 산업기반 부족, 청년농어민과 은퇴농·고령농어민이 혼재된 불분명한 정책시행(산업정책 및 복지정책 지원대상 혼재)으로 재정투입성과 창출 미흡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과 은퇴농업인 차등화한 정책 시행 필요, 즉, 청년농어민 산업정책 지원강화(이용가능한 농지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 은퇴농·고령농어민 정년제 및 연금제 도입으로 복지정책 지원으로 양분화 필요한 시점
- 결과적으로 젊은 농업인력 유치 및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정보 창출과 이를 활용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미흡한 실정
- 이번 연구는 충남의 농지, 농업경영체, 주요 농업 지원 정책(공익직불금, 농어민수당) 등 3가지 요소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글보고서는 물론 연속기획 시리즈물로 출판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 충청남도의 농지, 농업경영체, 주요 농업 지원 정책(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민수당) 등 3가지 요소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사각지대 지점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충청남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농업경영체 등록 실태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한 농업 지원정책 토대를 마련코자 함.
- 첫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별 특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 두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 농업경영체의 개별속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 세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농지와 농업경영체 자격기준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국가 공익직불금과 충남 농어민수당 등 주요 농업 지원정책을 공간 분포로 파악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 볼 것인가? 농지(땅) + 농민(사람) + 정책

- <시리즈 1>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발간 완료) : 충남의 농지,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충남 내 시군별 농지분포, 소유주체별 현황, 연령대별 현황, 농지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시리즈 2>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발간 완료) : 충남의 농업경영체, 얼마나 고령화되어 있고 어떤 상태로 농사짓고 있는가를 주제로 충남 내 시군별 농업경영체 분포, 연령대별 현황, 전업·겸업별 현황, 관외 거주자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시리즈 3> 충남 농업 지원정책 공간분포(안, 발간 예정) : 충남의 농지, 농민, 농업 지원정책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주제로 충남 내 농지 기반 위에서 실제 농

사짓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농어민수당 등 주요 농업 지원정책 대상과의 일치정도 등을 살펴보고자 함. 제도 및 정보의 공백을 발견하여 농지 및 농업경영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지원정책 설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과제 내용은 출판물 발간 연계(정책지도 3차례에 걸친 시리즈물 출판 완료, 예정)

● 연구의 방법 : 충남 정책지도 제작 과정(〈그림 1-1〉 참고)

- 데이터 수집 및 취합 → 데이터 클리닝 → 지오코딩(GIS 기반) → 데이터 초벌분석, 공간지도화 작업 → 공간지도화 해석, 시사점 도출 → 공간지도 수정 및 보완 → 정책지도 완성 → 발간물 제작 → 보도자료 배포 → 행정과 도민에게 관심유도 → 이슈 환기

〈그림 1-1〉 충남 정책지도 제작 프로세스



주 : 저자 작성함.

● 정책지도 발간물과 한글 보고서 차이점

- 정책지도 발간물은 충남 내 지역별 현황을 공간 분포로서 분석한 반면, 한글 보고서는 15개 시군별 구체적인 수치(절대값, 비중값)로 분석한 차이
- 정책지도 발간물은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였기에 결측치를 포함한 현황을 보여주었다면, 한글 보고서는 결측치를 포함한 경우와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분석
- 정책지도 발간물은 공간지도, 인포그래픽 등 그림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한글 보고서는 수치 표, 분석 내용 등 문장이 주를 이루는 차이

● 연구의 결과 : 충남 정책지도 발간(<그림 1-2> 참고)

- 결과물 ① (충남 정책지도 2022-08호) 충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별 특성에 따른 공간분포를 파악
- 결과물 ② (충남 정책지도 2022-09호) 충남 농업경영체의 개별속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

<그림 1-2> 충남 정책지도 발간 결과물(2022년)



자료 : 1. 강마야, 최돈정, 손성규(2022),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호 통권 35호, 충남연구원.
 2. 강마야, 최돈정, 손성규(2022),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9호 통권 36호, 충남연구원.

● 기대효과 :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농지와 농민은 농정설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로서 공간 실태 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농사지를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밑그림이 될 것임.
- 고령화되고 관외소유가 많은 충청남도의 농지 소유특성을 개선하여 젊은 농민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 및 규모화 위한 민선8기 농업정책의 큰 방향 설정에 토대가 될 것임.
- 농지대장+토지소유정보+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 불일치 정보를 개선하는데 기여함.
- 지자체 중 최초 지역형 통합 농지관리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임.
- 농업경영체 보조금, 직불금 등 실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화에 기여함.
- 신규 농민 및 청년 농민 유치를 위한 충청남도 내 공간전략 틀 수립 마련에 기여함.

02

농지소유 정보 실태분석

1. 제도 이해

● 농지소유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나와 있다.
-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을 말한다.
- 「농지법」 제6조 예외적인 농지소유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 예외조항이 계속 늘어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등
3.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등...

자료 : 농지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¹⁾

- 2021년 8월 17일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상향,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 상향 등
- 2022년 5월 18일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의무기재사항, 증명서류, 공유취득, 주말체험취득, 민원처리기간, 과태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농지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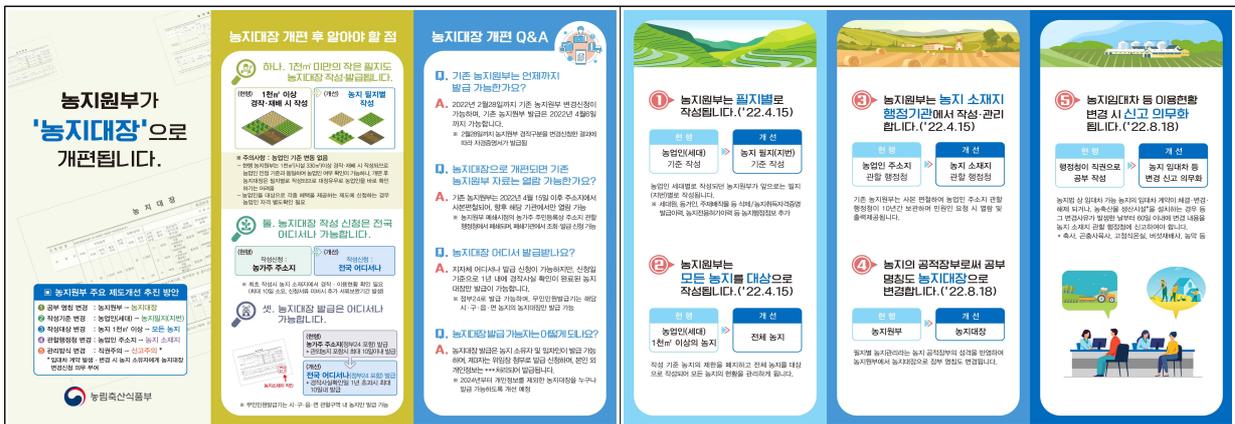
1) 자료 : 1. 농지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8.17.),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21.8.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 공포.

조사 정례화, 유휴농지 조사,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 2022년 8월 18일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의무화(신고사항, 과태료), 농지원부²⁾(농지 중심 문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지대장’(사람 중심 문서)으로 변경(<그림 2-1> 참고)

<그림 2-1> 농지대장 정책홍보 자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https://www.mafra.go.kr/home/524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NiUyRjQ4OTA5NC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자 : 2022.12.23.)

●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항목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 농지이용실태조사(농식품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사후관리업무로서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관리 효율성 제고 목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

2) 주 : 농지원부란,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를 말함(1973년 도입).

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조사

- 농업법인³⁾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 예정

● 농지를 둘러싼 최근 이슈 정리

- 2021년 LH사태는 농지의 경자유전과 투기 금지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 전반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이용 체계 구축,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질적 개선과 정보서비스 강화 요구 중
-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심사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개정 등 농지법 개정 요구
- 지역농업인·주민·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신설하여 농지 신규 취득 시 심의 의무화, 체계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을 중심으로 농지법 개정 요구
- 농지 취득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처분명령과 함께 처벌도 강화하는 기반 마련 등 농지법 개정 요구
- 농민들과 국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 행정정보에 대한 불신 팽배하여 농지 정보관리의 고도화 필요성 제기, 불일치하는 20%~30%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로 행정정보화 하기 위한 농지소유·이용 전수실태조사 필요성 제기(예.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지조서, 경영체등록정보 등 농지 행정정보와 현장 확인정보 불일치 다수 확인, 행정정보로 알기 어려운 미확인 정보 존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의거한 현황 파악 필요)
-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농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개선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하여 2022년 4월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중(김정호 국회의원 발의)

3) 주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함.

2.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

● 분석개요

- 발간물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호 통권 35호, 충남연구원(2022년 09월 16일 발간)
- 내용 :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등 자료 분석을 통해서 충남 내 시군별, 연령대별, 소유자 주소별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필지 수, 면적,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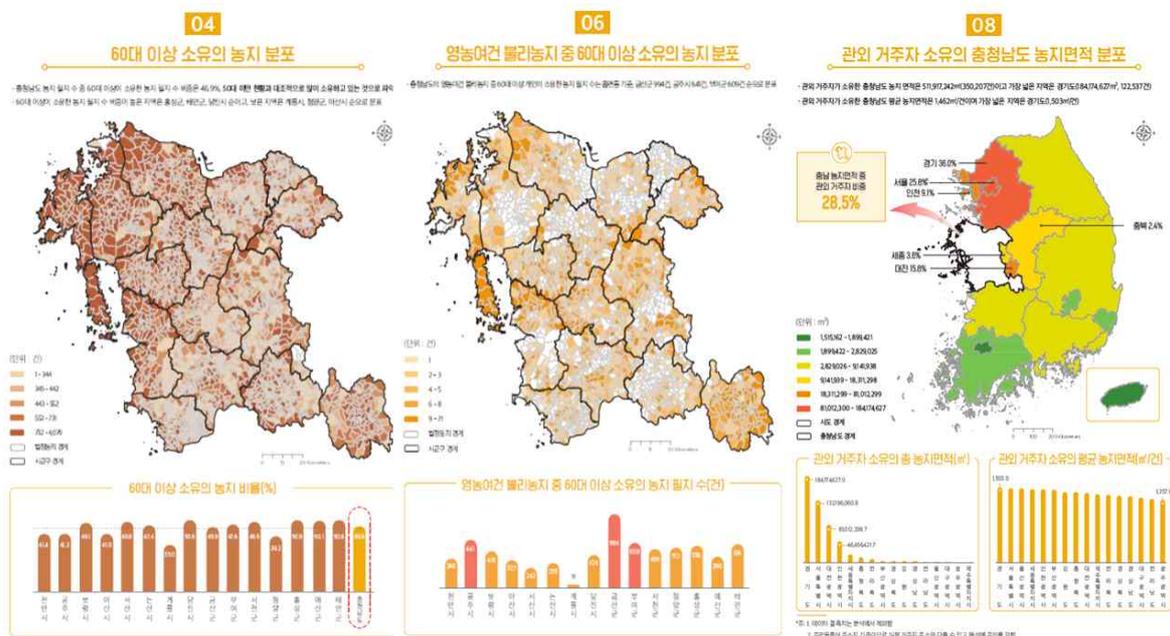
● 분석자료 : 사용한 기초데이터, 데이터 생성한 기관, 집계 기준시점

- 토지소유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2022년 7월 기준)
- 표준지공시지가 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2022년 7월 기준)
- 충남 1:5,000 연속 수치지형도 도로망 레이어(국토지리정보원)
- 충남 행정통계(통계청의 SGS 공간통계 서비스)

● 분석내용(〈그림 2-2〉 참고)

- 충청남도 농지 분포, 소유주체에 따른 농지분포, 50대 미만 소유 및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 및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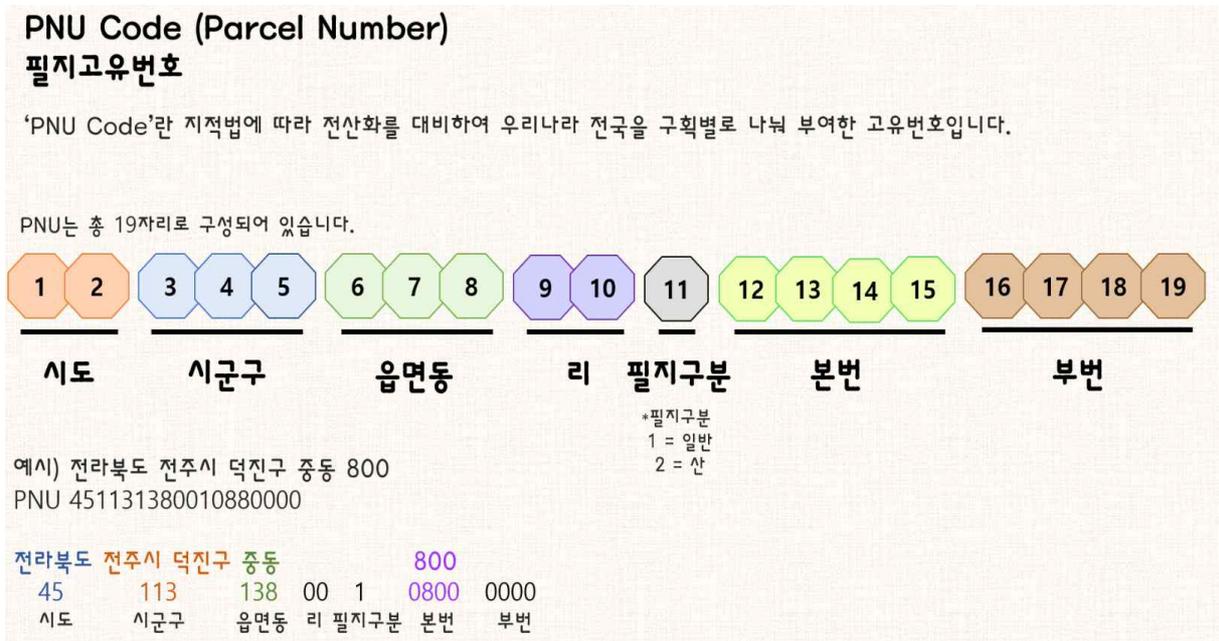
〈그림 2-2〉 충남 정책지도 :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자료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호 통권 35호, 충남연구원.

- 분석방법 ① : PNU 코드 활용하여 다른 분야 데이터 결합(<그림 2-3> 참고)
 - 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기준)와 ‘개별공시지가정보’(2022년 7월 기준) 활용
 - 토지소유정보의 데이터 수는 총 3,710,459건으로 그 중 「농지법」 제2조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된 농지는 1,703,514건으로 전체 데이터의 약 52% 수준
 -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공시지가의 PNU 코드(필지고유번호)를 활용하여 농지별 개별공시지가 데이터 결합

<그림 2-3> PNU Code의 개념과 구성



자료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go.kr/>, 검색일자 : 2022.12.26.)

● 분석방법 ② : 속성정보 결합, 융복합 데이터 구축, 활용(〈표 2-1〉 참고)

- 토지소유정보서비스와 개별공시지가정보에 소유된 있는 속성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한 속성정보를 통해 공간질의 및 농지 속성별, 공간 위계별 유연한 집계 가능
- 추출된 농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전역 농지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고 소유주체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농지소유 현황 파악
- 관외·관내는 거주지 구분 속성 활용하여 파악, 해당 정보는 시도(ex. 경기도)정보 제공
-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데이터와 개별공시지가 데이터 결합한 융복합 데이터 구축

〈표 2-1〉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및 개별공시지가 속성정보

토지소유정보(속성)	개별공시지가(속성)
고유번호	고유번호
법정동 코드	법정동 코드
법정동명	법정동명
대장 구분코드	대장 구분코드
대장구분명	대장구분명
지번	지번
지번지목부호	지번지목부호
소유구분코드	기준연도
소유구분명	기준월
공유인수	개별공시지가
연령대구분코드	표준지여부
연령대구분	지목코드
거주지구분코드	지목
거주지구분	토지면적
국가기관구분코드	데이터 기준일자
국가기관구분	
소유권변동원인코드	
소유권변동원인	
소유권변동일자	
지목코드	
지목	
라벨	
토지면적	
데이터 기준일자	

자료 : 국토교통부(2022), 국가정보자원 개방·공유체계 구축 : 공간정보_컬럼정의서.

3. 분석결과

● 전체 개요로서 충청남도 농지⁴⁾ 분포(〈표 2-2〉 참고)

- 충청남도 전체 필지 수⁵⁾는 3,710,459건, 필지 면적은 8,223,555,048.2㎡(822,355.5ha) 이 중 농지 필지 수는 1,703,514건(45.9%), 농지면적은 2,462,364,018.7㎡(246,236.4ha, 29.9%) 차지, 농지 1필지 당 면적은 1,445.5㎡(438평)
- 농지 필지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금산군(49.6%),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 농지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10.1%)
- 1필지 당 면적이 큰 곳은 당진시(1,770.8㎡, 536평), 서산시, 태안군, 부여군 순, 1필지 당 면적이 작은 곳은 계룡시(1,094.4㎡, 331평),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순

〈표 2-2〉 충청남도 농지 분포(2022년 7월 기준, 이하 동일)

시군	전체 필지 수(건)	전체 농지 필지 수(건)*	농지 필지 수 비율(%)	전체 필지 면적(㎡)	전체 농지면적(㎡)*	농지면적 비율(%)	필지당 농지면적(㎡)
천안시	305,356	121,520	39.8	636,142,235	159,864,120	25.1	1,315.5
공주시	284,328	134,883	47.4	861,792,629	155,609,826	18.1	1,153.7
보령시	243,401	110,843	45.5	586,260,089	144,314,386	24.6	1,302.0
아산시	289,594	129,737	44.8	538,773,773	183,461,860	34.1	1,414.1
서산시	332,281	153,045	46.1	740,423,647	269,992,359	36.5	1,764.1
논산시	304,648	137,456	45.1	550,757,933	201,451,540	36.6	1,465.6
계룡시	18,433	5,624	30.5	60,645,443	6,154,693	10.1	1,094.4
당진시	354,540	158,886	44.8	703,421,260	281,359,030	40.0	1,770.8
금산군	190,714	94,509	49.6	574,574,977	106,113,660	18.5	1,122.8
부여군	271,837	127,937	47.1	623,536,083	190,180,820	30.5	1,486.5
서천군	207,604	97,349	46.9	365,609,401	138,452,947	37.9	1,422.2
청양군	169,803	83,056	48.9	478,651,983	104,719,682	21.9	1,260.8
홍성군	246,754	114,955	46.6	445,737,481	159,143,197	35.7	1,384.4
예산군	266,967	127,984	47.9	542,298,743	187,985,756	34.7	1,468.8
태안군	224,198	105,730	47.2	514,929,370	173,560,143	33.7	1,641.5
충남 전체	3,710,459	1,703,514	45.9	8,223,555,048	2,462,364,018.7	29.9	1,445.5
(ha 환산)				822,355.5	246,236.4		

주 : *은 결측치를 포함하는 농지 필지 수, 농지면적 값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결측치란 ‘빈값’, ‘구분없음’, 그 밖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하 동일).

4) 주 : 농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 답, 과수원 등인 토지를 말함(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자 : 2022.12.26.).

5) 주 : 필지란, 땅에 대한 소유권 기준의 토지구역 경계로서 토지등록 기본단위이고 필지별 최소면적 기준은 없음. 논, 밭, 임야, 대지 등을 세는 단위이므로 ‘건’이라는 단위로 표시함.

● 충청남도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필지 수 기준, <표 2-3> 참고)

<결측치 포함>

- 충청남도 전체 필지 수 3,710,459건 중 농지 필지 수는 1,703,514건으로 45.9% 차지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1,703,514건 중 개인 소유의 농지 필지 수 비중은 71.7%, 국유지 5.2%, 공유지 7.6%(시도유지 1.8%, 군유지 5.8%), 기타 15.5%

<결측치 미포함>

- 충청남도 전체 필지 수 3,710,459건 중 농지 필지 수는 1,534,756건으로 41.3% 차지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1,534,756건 중 개인 소유의 농지 필지 수 비중은 79.6%, 국유지는 5.7%, 공유지는 8.5%(시도유지 2.0%, 군유지 6.5%), 기타 소유는 6.2%

● 충청남도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면적 기준, <표 2-4> 참고)

<결측치 포함>

- 충청남도 전체 면적 8,223,555천 m²(822,355.5ha) 중 농지면적은 2,462,364천 m²(246,236.4ha)으로 29.9% 차지
- 충청남도 농지면적 2,462,364천 m² 중 개인 소유의 농지면적 비중은 75.7%, 국유지는 2.6%, 공유지는 2.2%, 기타 소유는 19.5%

<결측치 미포함>

- 충청남도 전체 면적 8,223,555천 m²(822,355.5ha) 중 농지면적은 2,184,434.7천 m²(218,443.5ha)으로 26.5% 차지
- 충청남도 농지면적 2,184,434.7천 m² 중 개인 소유의 농지면적 비중은 85.3%, 국유지는 2.9%, 공유지는 2.5%, 기타 소유는 9.2%

〈표 2-3〉 충청남도 소유주체별 농지 필지 수 분포

시군	결측치 포함 농지 필지 수(건)	소유주체별 비중(%)				결측치 미포함 농지 필지 수(건)	소유주체별 비중(%)			
		개인소유	국유지	공유지	기타소유		개인소유	국유지	공유지	기타소유
천안시	121,520	64.1%	5.9%	10.4%	19.6%	106,493	73.2%	6.7%	11.8%	8.3%
공주시	134,883	66.0%	8.7%	9.3%	16.0%	121,705	73.2%	9.6%	10.3%	7.0%
보령시	110,843	75.2%	5.7%	5.3%	13.8%	101,430	82.1%	6.3%	5.8%	5.8%
아산시	129,737	62.7%	9.8%	8.8%	18.7%	113,700	71.6%	11.2%	10.0%	7.2%
서산시	153,045	74.5%	2.9%	7.1%	15.5%	136,582	83.5%	3.2%	8.0%	5.3%
논산시	137,456	70.7%	4.5%	10.4%	14.4%	126,626	76.7%	4.9%	11.3%	7.1%
계룡시	5,624	49.6%	12.9%	17.4%	20.1%	4,915	56.8%	14.8%	19.9%	8.5%
당진시	158,886	74.7%	2.7%	5.1%	17.6%	139,728	84.9%	3.0%	5.8%	6.3%
금산군	94,509	74.1%	2.3%	9.8%	13.8%	85,145	82.3%	2.5%	10.9%	4.3%
부여군	127,937	70.4%	9.3%	6.3%	14.0%	118,149	76.2%	10.0%	6.9%	6.9%
서천군	97,349	73.4%	3.6%	7.4%	15.5%	87,611	81.6%	4.1%	8.2%	6.2%
청양군	83,056	70.8%	5.3%	8.0%	16.0%	75,344	78.0%	5.8%	8.8%	7.4%
홍성군	114,955	77.3%	4.2%	5.1%	13.4%	104,807	84.8%	4.6%	5.6%	5.0%
예산군	127,984	76.2%	3.7%	7.1%	13.0%	116,844	83.4%	4.1%	7.8%	4.7%
태안군	105,730	75.9%	2.9%	7.0%	14.2%	95,677	83.9%	3.2%	7.7%	5.2%
충남 전체	1,703,514	71.7%	5.2%	7.6%	15.5%	1,534,756	79.6%	5.7%	8.5%	6.2%

주 : 결측치는 해당항목에 '빈값', '구분없음', 그 밖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하 동일).

〈표 2-4〉 충청남도 소유주체별 농지면적 분포

시군	결측치 포함 농지면적(천 m)	소유주체별 비중(%)				결측치 미포함 농지면적(천m)	소유주체별 비중(%)			
		개인소유	국유지	공유지	기타소유		개인소유	국유지	공유지	기타소유
천안시	159,864.1	72.9%	2.6%	2.6%	21.9%	136,696.5	85.3%	3.0%	3.0%	8.7%
공주시	155,609.8	73.3%	5.1%	3.0%	18.6%	137,667.0	82.8%	5.7%	3.4%	8.0%
보령시	144,314.4	78.5%	3.5%	1.7%	16.4%	130,849.0	86.6%	3.8%	1.8%	7.7%
아산시	183,461.9	71.2%	5.6%	3.1%	20.1%	158,106.3	82.6%	6.5%	3.6%	7.3%
서산시	269,992.4	72.2%	1.6%	1.5%	24.7%	232,302.0	83.9%	1.8%	1.7%	12.5%
논산시	201,451.5	78.8%	2.1%	2.3%	16.8%	183,285.0	86.6%	2.3%	2.5%	8.6%
계룡시	6,154.7	50.1%	21.0%	5.8%	23.1%	5,211.2	59.2%	24.8%	6.8%	9.2%
당진시	281,359.0	73.5%	1.0%	1.6%	23.8%	248,455.7	83.2%	1.2%	1.8%	13.7%
금산군	106,113.7	79.5%	1.1%	3.5%	15.9%	93,877.9	89.9%	1.2%	4.0%	5.0%
부여군	190,180.8	77.6%	5.4%	1.9%	15.0%	174,417.5	84.6%	5.9%	2.1%	7.4%
서천군	138,452.9	78.1%	1.4%	1.7%	18.8%	123,455.7	87.6%	1.6%	1.9%	8.9%
청양군	104,719.7	78.0%	2.4%	2.5%	17.1%	93,901.5	87.0%	2.7%	2.8%	7.6%
홍성군	159,143.2	80.6%	1.2%	1.4%	16.8%	142,736.5	89.9%	1.4%	1.5%	7.2%
예산군	187,985.8	81.5%	1.7%	2.2%	14.6%	170,148.1	90.1%	1.9%	2.4%	5.7%
태안군	173,560.1	70.7%	1.7%	3.2%	24.4%	153,324.9	80.0%	1.9%	3.6%	14.5%
충남 전체	2,462,364.0	75.7%	2.6%	2.2%	19.5%	2,184,434.7	85.3%	2.9%	2.5%	9.2%
(ha 환산)	246,236.4					218,443.5				

주 : 결측치는 해당항목에 '빈값', '구분없음', 그 밖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하 동일).

●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지 분포(필지 수 기준)

〈결측치 포함, 〈표 2-5〉 참고〉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중 50대 미만 비중은 7.1%에 불과, 60대 이상 비중은 46.9% 차지, 50대 미만 현황과 대조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60대 이상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석, 결측치는 32.3%에 달함.
- (절대값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가 많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가 많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순
- (비율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 순

〈결측치 미포함, 〈표 2-6〉 참고〉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중 50대 미만 비중은 10.5%에 불과하여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60대 이상 비중은 69.2% 차지, 50대 미만 현황과 대조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60대 이상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
- (절대값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가 많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가 많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순
- (비율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순

〈표 2-5〉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지 필지 수 분포(결측치 포함)

시군	결측치 포함 농지 수(건)	결측치 포함 농지 필지 수(건)			결측치	결측치 포함 농지 필지 수 비중(%)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결측치
천안시	121,520	7,881	16,277	50,343	47,019	6.5%	13.4%	41.4%	38.7%
공주시	134,883	8,886	17,650	55,688	52,659	6.6%	13.1%	41.3%	39.0%
보령시	110,843	9,071	15,702	54,395	31,675	8.2%	14.2%	49.1%	28.6%
아산시	129,737	8,021	16,966	53,235	51,515	6.2%	13.1%	41.0%	39.7%
서산시	153,045	11,284	22,119	76,211	43,431	7.4%	14.5%	49.8%	28.4%
논산시	137,456	9,183	17,625	65,211	45,437	6.7%	12.8%	47.4%	33.1%
계룡시	5,624	268	548	1,857	2,951	4.8%	9.7%	33.0%	52.5%
당진시	158,886	11,578	22,787	80,367	44,154	7.3%	14.3%	50.6%	27.8%
금산군	94,509	6,836	14,317	43,407	29,949	7.2%	15.1%	45.9%	31.7%
부여군	127,937	8,372	15,189	60,896	43,480	6.5%	11.9%	47.6%	34.0%
서천군	97,349	7,268	12,227	48,301	29,553	7.5%	12.6%	49.6%	30.4%
청양군	83,056	5,891	11,535	32,542	33,088	7.1%	13.9%	39.2%	39.8%
홍성군	114,955	8,811	17,053	58,516	30,575	7.7%	14.8%	50.9%	26.6%
예산군	127,984	9,699	18,177	64,172	35,936	7.6%	14.2%	50.1%	28.1%
태안군	105,730	8,008	15,477	53,466	28,779	7.6%	14.6%	50.6%	27.2%
충남 전체	1,703,514	121,057	233,649	798,607	550,201	7.1%	13.7%	46.9%	32.3%

〈표 2-6〉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지 필지 수 분포(결측치 미포함)

시군	결측치 미포함 농지 수(건)	결측치 미포함 농지 필지 수(건)			결측치 미포함 농지 필지 수 비중(%)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천안시	74,501	7,881	16,277	50,343	10.6%	21.8%	67.6%	
공주시	82,224	8,886	17,650	55,688	10.8%	21.5%	67.7%	
보령시	79,168	9,071	15,702	54,395	11.5%	19.8%	68.7%	
아산시	78,222	8,021	16,966	53,235	10.3%	21.7%	68.1%	
서산시	109,614	11,284	22,119	76,211	10.3%	20.2%	69.5%	
논산시	92,019	9,183	17,625	65,211	10.0%	19.2%	70.9%	
계룡시	2,673	268	548	1,857	10.0%	20.5%	69.5%	
당진시	114,732	11,578	22,787	80,367	10.1%	19.9%	70.0%	
금산군	64,560	6,836	14,317	43,407	10.6%	22.2%	67.2%	
부여군	84,457	8,372	15,189	60,896	9.9%	18.0%	72.1%	
서천군	67,796	7,268	12,227	48,301	10.7%	18.0%	71.2%	
청양군	49,968	5,891	11,535	32,542	11.8%	23.1%	65.1%	
홍성군	84,380	8,811	17,053	58,516	10.4%	20.2%	69.3%	
예산군	92,048	9,699	18,177	64,172	10.5%	19.7%	69.7%	
태안군	76,951	8,008	15,477	53,466	10.4%	20.1%	69.5%	
충남 전체	1,153,313	121,057	233,649	798,607	10.5%	20.3%	69.2%	

●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지 분포(면적 기준)

〈결측치 포함, <표 2-7> 참고〉

- 충청남도 농지면적 중 50대 미만 비중은 7.7%에 불과, 60대 이상 비중은 50.8% 차지, 50대 미만 현황과 대조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60대 이상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석, 결측치는 27.2%에 달함.
- (절대값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순
- (비율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예산군, 논산시, 서천군 순

〈결측치 미포함, <표 2-8> 참고〉

- 충청남도 농지면적 중 50대 미만 비중은 10.5%에 불과하여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비중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60대 이상 비중은 69.7% 차지, 50대 미만 현황과 대조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60대 이상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
- (절대값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순
- (비율 기준)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은 청양군, 보령시, 홍성군 순,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부여군, 서천군, 당진시 순

〈표 2-7〉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지면적 분포(결측치 포함)

시군	결측치 포함 농지면적 (천 m ²)	결측치 포함 농지면적(천 m ²)				결측치 포함 농지면적 비중(%)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결측치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결측치
천안시	159,864.1	11,211.9	23,642.4	78,188.7	46,821.0	7.0%	14.8%	48.9%	29.3%
공주시	155,609.8	11,358.1	22,674.0	73,146.3	48,431.4	7.3%	14.6%	47.0%	31.1%
보령시	144,314.4	13,286.5	21,522.0	75,019.6	34,486.4	9.2%	14.9%	52.0%	23.9%
아산시	183,461.9	12,415.7	26,024.6	88,709.8	56,311.7	6.8%	14.2%	48.4%	30.7%
서산시	269,992.4	20,445.7	38,683.9	131,194.3	79,668.4	7.6%	14.3%	48.6%	29.5%
논산시	201,451.5	15,363.5	29,093.5	109,104.1	47,890.4	7.6%	14.4%	54.2%	23.8%
계룡시	6,154.7	308.6	559.0	2,128.4	3,158.6	5.0%	9.1%	34.6%	51.3%
당진시	281,359.0	20,010.7	38,288.9	144,054.0	79,005.4	7.1%	13.6%	51.2%	28.1%
금산군	106,113.7	8,373.6	17,532.4	53,989.2	26,218.5	7.9%	16.5%	50.9%	24.7%
부여군	190,180.8	14,907.4	25,475.1	101,114.3	48,684.1	7.8%	13.4%	53.2%	25.6%
서천군	138,452.9	11,323.8	18,466.7	74,323.4	34,339.0	8.2%	13.3%	53.7%	24.8%
청양군	104,719.7	8,692.6	16,511.1	45,889.9	33,626.1	8.3%	15.8%	43.8%	32.1%
홍성군	159,143.2	13,597.8	25,007.9	85,363.5	35,174.0	8.5%	15.7%	53.6%	22.1%
예산군	187,985.8	15,587.3	28,313.9	103,027.4	41,057.2	8.3%	15.1%	54.8%	21.8%
태안군	173,560.1	12,277.3	22,601.7	84,626.8	54,054.4	7.1%	13.0%	48.8%	31.1%
충남전체	2,462,364.0	189,160.7	354,397.1	1,249,879.7	668,926.4	7.7%	14.4%	50.8%	27.2%

〈표 2-8〉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지면적 분포(결측치 미포함)

시군	결측치 미포함 농지면적 (천 m ²)	결측치 미포함 농지면적(천 m ²)			결측치 미포함 농지면적 비중(%)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40대 (젊은 농업인)	50대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
천안시	113,043.1	11,211.9	23,642.4	78,188.7	9.9%	20.9%	69.2%
공주시	107,178.5	11,358.1	22,674.0	73,146.3	10.6%	21.2%	68.2%
보령시	109,828.0	13,286.5	21,522.0	75,019.6	12.1%	19.6%	68.3%
아산시	127,150.2	12,415.7	26,024.6	88,709.8	9.8%	20.5%	69.8%
서산시	190,323.9	20,445.7	38,683.9	131,194.3	10.7%	20.3%	68.9%
논산시	153,561.1	15,363.5	29,093.5	109,104.1	10.0%	18.9%	71.0%
계룡시	2,996.1	308.6	559.0	2,128.4	10.3%	18.7%	71.0%
당진시	202,353.6	20,010.7	38,288.9	144,054.0	9.9%	18.9%	71.2%
금산군	79,895.2	8,373.6	17,532.4	53,989.2	10.5%	21.9%	67.6%
부여군	141,496.8	14,907.4	25,475.1	101,114.3	10.5%	18.0%	71.5%
서천군	104,113.9	11,323.8	18,466.7	74,323.4	10.9%	17.7%	71.4%
청양군	71,093.6	8,692.6	16,511.1	45,889.9	12.2%	23.2%	64.5%
홍성군	123,969.2	13,597.8	25,007.9	85,363.5	11.0%	20.2%	68.9%
예산군	146,928.6	15,587.3	28,313.9	103,027.4	10.6%	19.3%	70.1%
태안군	119,505.8	12,277.3	22,601.7	84,626.8	10.3%	18.9%	70.8%
충남 전체	1,793,437.6	189,160.7	354,397.1	1,249,879.7	10.5%	19.8%	69.7%

●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⁶⁾와 연령대별 농지 분포(필지 수 기준, <표 2-9> 참고)

-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개인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는 금산군 125건, 공주시 91건, 부여군 65건 순
-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개인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는 금산군 994건, 공주시 641건, 부여군 609건 순

●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와 연령대별 농지 분포(면적 기준, <표 2-9> 참고)

-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개인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보령시 332,859㎡(33.3ha), 태안군 310,777㎡(31.1ha), 금산군 288,765㎡(28.9ha) 순
-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개인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금산군 2,299,864㎡(229.9ha), 태안군 2,142,662㎡(214.3ha), 공주시 1,495,187㎡(149.5ha) 순

<표 2-9> 충청남도 영농여건 불리농지와 연령대별 농지 분포(필지 수, 면적)

시군	전체 불리농지 수(건)	전체 불리농지면적 (㎡)	50대 미만				60대 이상			
			농지 필지 수(건)	비중 (%)	농지면적 (㎡)	비중 (%)	농지 필지 수(건)	비중 (%)	농지면적 (㎡)	비중 (%)
천안시	2,941	5,298,719	41	1.4%	86,417	1.6%	349	11.9%	903,108	17.0%
공주시	6,607	10,342,918	91	1.4%	192,478	1.9%	641	9.7%	1,495,187	14.5%
보령시	2,569	4,284,704	64	2.5%	332,859	7.8%	478	18.6%	1,010,418	23.6%
아산시	2,289	3,735,460	33	1.4%	86,374	2.3%	327	14.3%	969,050	25.9%
서산시	1,315	1,988,268	17	1.3%	36,755	1.8%	242	18.4%	696,868	35.0%
논산시	1,822	2,934,615	26	1.4%	61,456	2.1%	295	16.2%	803,038	27.4%
계룡시	250	330,889	3	1.2%	11,610	3.5%	18	7.2%	47,952	14.5%
당진시	1,986	2,804,567	40	2.0%	116,823	4.2%	424	21.3%	1,384,975	49.4%
금산군	7,280	12,336,605	125	1.7%	288,765	2.3%	994	13.7%	2,299,864	18.6%
부여군	3,873	6,258,207	65	1.7%	147,785	2.4%	609	15.7%	1,596,323	25.5%
서천군	2,312	3,123,849	55	2.4%	136,513	4.4%	496	21.5%	1,188,057	38.0%
청양군	3,948	6,381,640	61	1.5%	132,221	2.1%	512	13.0%	1,062,380	16.6%
홍성군	2,283	3,485,571	56	2.5%	131,479	3.8%	556	24.4%	1,407,340	40.4%
예산군	2,586	4,001,198	44	1.7%	96,533	2.4%	396	15.3%	1,389,668	34.7%
태안군	2,713	4,095,401	62	2.3%	310,777	7.6%	576	21.2%	2,142,662	52.3%
충남전체	44,774	71,402,610	783	1.7%	2,168,846	3.0%	6,913	15.4%	18,396,891	25.8%

6) 주 :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놓인 농지를 말함.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표 2-10〉 참고)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는 결측치 포함 시 1,703,514건, 결측치 미포함 시 1,153,066건
- 충청남도 농지지가 총액은 결측치 포함 시 80.4조 원, 결측치 미포함시 56조 원
- 농지 필지 당 평균지가는 결측치 포함 시 47,224.6천 원, 결측치 미포함 시 48,636.7천 원
- 결측치 미포함 시, 16개 시도에 있는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는 350,207건으로서 관외 거주자 전체 필지 비중의 30.4%를 차지
- 결측치 미포함 시, 16개 시도에 있는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 지가 총액은 15.8조 원으로서 관외 거주자 전체 지가총액 비중의 28.2%를 차지
- 결측치 미포함 시, 16개 시도에 있는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 필지 당 평균지가는 45,237.4천 원
- 농지 필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122,537건, 서울특별시 89,068건, 대전광역시 58,267건 순
- 농지지가 총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5.5조 원, 서울특별시 4.5조 원, 대전광역시 2.3조 원, 인천광역시 1.2조 원 순

●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표 2-11〉 참고)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는 결측치 포함 시 1,703,514건, 결측치 미포함 시 1,153,066건
- 충청남도 농지면적은 결측치 포함 시 2,462,364.0천 m²(246,236.4ha), 결측치 미포함 시 1,793,193.4천 m²(179,319.3ha)
- 평균 농지면적은 결측치 포함 시 1,445.5m²(0.14ha), 결측치 미포함 시 1,555.2m²(0.15ha)
- 결측치 미포함 시, 16개 시도에 있는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는 350,207건으로서 관외 거주자 전체 필지 비중의 28.5%를 차지
- 결측치 미포함 시, 16개 시도에 있는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면적은 511,917.2천 m²(51,191.7ha)으로서 관외 거주자 전체 지가총액 비중의 30.4%를 차지
- 결측치 미포함 시, 16개 시도에 있는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평균 농지면적은 1,461.8m²(0.15ha)
- 농지 필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122,537건, 서울특별시 89,068건, 대전광역시 58,267건 순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184,174.6천 m², 서울특별시 132,196.1천 m², 대전광역시 81,012.3천 m², 인천광역시 46,456.4천 m² 순

〈표 2-10〉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시도	농지 필지 수(건)	지가총액 (백만 원)	농지 필지 당 평균지가(원)	결측치 포함		결측치 미포함	
				관외거주자 필지 비중(%)	관외거주자 지가 비중(%)	관외거주자 필지 비중(%)	관외거주자 지가 비중(%)
강원도	3,005	138,224.9	45,998,291	0.2%	0.2%	0.3%	0.2%
경기도	122,537	5,520,966.0	45,055,501	7.2%	6.9%	10.6%	9.8%
경상남도	3,081	132,161.6	42,895,671	0.2%	0.2%	0.3%	0.2%
경상북도	3,195	147,582.8	46,191,793	0.2%	0.2%	0.3%	0.3%
광주광역시	1,511	78,366.7	51,864,112	0.1%	0.1%	0.1%	0.1%
대구광역시	1,821	83,584.1	45,900,109	0.1%	0.1%	0.2%	0.1%
대전광역시	58,267	2,313,338.4	39,702,377	3.4%	2.9%	5.1%	4.1%
부산광역시	2,959	136,690.7	46,194,904	0.2%	0.2%	0.3%	0.2%
서울특별시	89,068	4,530,472.9	50,865,326	5.2%	5.6%	7.7%	8.1%
세종특별자치시	12,447	601,025.9	48,286,809	0.7%	0.7%	1.1%	1.1%
울산광역시	1,801	89,839.1	49,882,883	0.1%	0.1%	0.2%	0.2%
인천광역시	31,670	1,258,956.1	39,752,325	1.9%	1.6%	2.7%	2.2%
전라남도	2,219	96,108.8	43,311,775	0.1%	0.1%	0.2%	0.2%
전라북도	6,762	247,880.2	36,657,829	0.4%	0.3%	0.6%	0.4%
제주특별자치도	1,112	59,588.7	53,586,981	0.1%	0.1%	0.1%	0.1%
충청북도	8,752	407,689.2	46,582,402	0.5%	0.5%	0.8%	0.7%
소계	350,207	15,842,476.1	45,237,463	20.6%	19.7%	30.4%	28.2%
충남 시군구내	226,418	13,386,456.1	59,122,755	13.3%	16.6%	19.6%	23.9%
충남 시도내	81,757	5,154,758.3	63,049,749	4.8%	6.4%	7.1%	9.2%
충남 읍면동내	494,684	21,697,600.3	43,861,536	29.0%	27.0%	42.9%	38.7%
결측치(구분없음)	381,690	12,720,709.3	33,327,332	22.4%	15.8%		
결측치(빈값)	168,758	11,645,752.2	69,008,594	9.9%	14.5%		
결측치 포함 합계	1,703,514	80,447,752.3 (관외 비중 19.7%)	47,224,591	100.0%	100.0%		
결측치 미포함 합계	1,153,066	56,081,290.8 (관외 비중 28.2%)	48,636,670			100.0%	100.0%

〈표 2-11〉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

시도	농지 필지 수(건)	농지면적 (천 m ²)	결측치 포함			결측치 미포함		
			면적 비중(%)	필지 비중(%)	평균농지면적 (m ²)	면적 비중(%)	필지 비중(%)	평균농지면적 (m ²)
강원도	3,005	4,255.9	0.2%	0.2%	1,416.3	0.2%	0.3%	1,416.3
경기도	122,537	184,174.6	7.5%	7.2%	1,503.0	10.3%	10.6%	1,503.0
경상남도	3,081	4,106.1	0.2%	0.2%	1,332.7	0.2%	0.3%	1,332.7
경상북도	3,195	4,281.8	0.2%	0.2%	1,340.1	0.2%	0.3%	1,340.1
광주광역시	1,511	1,899.4	0.1%	0.1%	1,257.1	0.1%	0.1%	1,257.1
대구광역시	1,821	2,367.3	0.1%	0.1%	1,300.0	0.1%	0.2%	1,300.0
대전광역시	58,267	81,012.3	3.3%	3.4%	1,390.4	4.5%	5.1%	1,390.4
부산광역시	2,959	4,305.3	0.2%	0.2%	1,455.0	0.2%	0.3%	1,455.0
서울특별시	89,068	132,196.1	5.4%	5.2%	1,484.2	7.4%	7.7%	1,484.2
세종특별자치시	12,447	18,311.3	0.7%	0.7%	1,471.1	1.0%	1.1%	1,471.1
울산광역시	1,801	2,671.9	0.1%	0.1%	1,483.5	0.1%	0.2%	1,483.5
인천광역시	31,670	46,456.4	1.9%	1.9%	1,466.9	2.6%	2.7%	1,466.9
전라남도	2,219	2,829.0	0.1%	0.1%	1,274.9	0.2%	0.2%	1,274.9
전라북도	6,762	9,141.9	0.4%	0.4%	1,352.0	0.5%	0.6%	1,352.0
제주특별자치도	1,112	1,515.2	0.1%	0.1%	1,362.6	0.1%	0.1%	1,362.6
충청북도	8,752	12,392.8	0.5%	0.5%	1,416.0	0.7%	0.8%	1,416.0
소계	350,207	511,917.2	20.8%	20.6%	1,461.8	28.5%	30.4%	1,461.8
충남 시군구내	226,418	422,139.6	17.1%	13.3%	1,864.4	23.5%	19.6%	1,864.4
충남 시도내	81,757	131,142.9	5.3%	4.8%	1,604.1	7.3%	7.1%	1,604.1
충남 읍면동내	494,684	727,993.7	29.6%	29.0%	1,471.6	40.6%	42.9%	1,471.6
결측치(구분없음)	381,690	391,194.2	15.9%	22.4%	1,024.9			
결측치(빈값)	168,758	277,976.4	11.3%	9.9%	1,647.2			
결측치 포함 합계	1,703,514	2,462,364.0	100.0%	100.0%	1,445.5			
결측치 미포함 합계	1,153,066	1,793,193.4				100.0%	100.0%	1,555.2

0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태분석

1. 제도 이해

● 농업경영체에 대한 이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데 농업인은 다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른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을 말하고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1. 1천제곱미터(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실제로는 이 조건만 인정)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 농어업경영체법 주요 개정사항⁷⁾

- 2021년 8월 17일 시행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 2022년 5월 18일 시행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 2022년 8월 18일 시행 :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7) 자료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8.17.),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21.8.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 공포.

과징금 부과

● 농업경영체를 둘러싼 최근 이슈 정리

- 농업경영체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농업인, 농민 등과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 중
- 농업경영체 주요 이슈로는 실제 거주지 문제, 경작면적 기준 문제, 여성농업인 미인정 문제,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불일치 문제, 농지 임대차·비농업인 소유의 상속농지·증여 농지 실제 경작 문제, 은퇴농·고령농 등 연령 문제, 소득 현행화 및 타 분야와의 직업 충돌 문제, 정보 격차 문제, 공익기능 개념 부정확성, 이행점검과 관리감독 문제 등
- 농업경영체가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 증명하고 인정하는 수단이 부재한 것에 대한 논란
- 일정 농지면적만 확보하면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허점 이용한 가짜 농업인 양산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농지만 인정되는 것은 임차비중 높은 현실과 배치되는 문제
- 대부분 농정 보조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만을 중요한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여 누락되고 배제되는 계층 발생(예. 여성농민, 청년농민, 불법임대차 거래 노출된 농민 등)
-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은 무급종사자로 인식되어 법적·제도적 지위보장이 취약한 구조
- 농업경영체, 농가인구, 농업인, 농민 등 통계수치 차이, 모호한 개념에 따른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

2.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

● 분석개요

- 발간물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9호 통권 36호, 충남연구원(2022년 11월 22일 발간)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충남 내 시군별, 연령대별, 전업-겸업별, 규모별 농지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임대차, 거주지, 소재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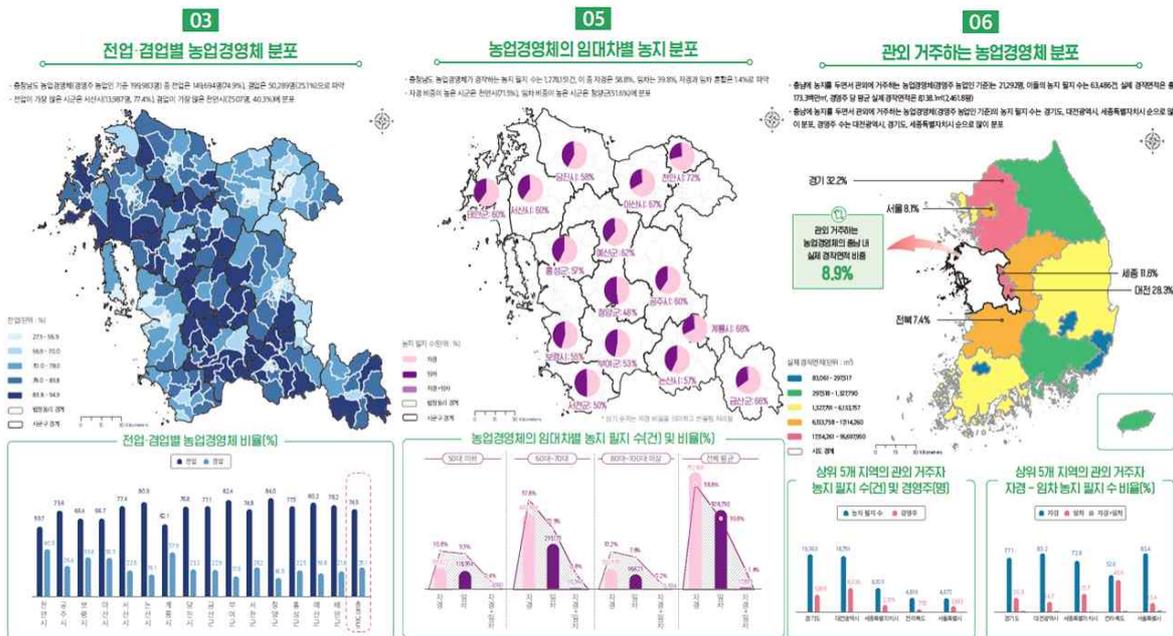
● 분석자료 : 사용한 기초데이터, 데이터 생성한 기관, 집계 기준시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9월 기준)
- 충남 1:5,000 연속 수치지형도 도로망 레이어(국토지리정보원)
- 충남 행정통계(통계청의 SGS 공간통계 서비스)

● 분석내용(<그림 3-1>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포,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 분포,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분포,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분포

<그림 3-1> 충남 정책지도 :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자료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9호 통권 36호, 충남연구원.

● 분석방법 : 속성정보 결합, 활용(〈표 3-1〉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받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2022년 9월 기준)를 활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농지경영주로 구분되어 제공
- 농지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도·시군구·읍면동·리·본번·부번을 통해 지오코딩을 진행하여 공간DB로 변환하여 활용
- 농지정보와 경영주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속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PK(Primary Key)값⁸⁾으로 구분하여 경영주와 농지 결합
- 결합된 농지정보는 실제 경영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농지의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 거주지와 경작농지의 현황 분석
- 생년월일을 통해 연령대를 구분하였으며 〈시리즈 1〉에서 활용한 필지정보와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군별·경영주별·관외·관내 등 추가정보 도출

〈표 3-1〉 농업경영체 속성정보

경영주(속성)	농지(속성)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시도
성별	시군구
시도	읍면동
시군구	리
읍면동	본번
농업시작형태	부번
농업종사형태	경영형태
농업종사기간	공부지목
농업시작연도	실제지목
	공부면적
	실제 경작면적
	휴경면적
	폐경면적
	시설종류
	시설면적
	재배품목 대
	재배품목 중
	재배품목 소
	재배면적 노지
	재배면적 시설

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lIndex.do?web=in, 검색일자 : 2022.10.01.).

8) 주 : 관계형 DB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PK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속성 항목과 중복되어 나타날 수 없는 단일 값(Unique Value)를 가짐. 이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테이블간의 속성 매칭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농지와 경영주 테이블간의 등록정보를 PK값으로 활용함.

3. 분석결과

● 전체 개요로서 충청남도 농업경영체⁹⁾ 분포(〈표 3-2〉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199,983명, 이 중 남자 경영주는 143,447명(71.7%), 여자 경영주는 56,536명(28.3%)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91,023명, 이 중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는 9,978명(경영주 농업인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5.0%)에 불과
-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 수 기준으로 많은 시군은 천안시 18,633명, 서산시 18,071명, 당진시 16,933명 순
- 시군 내 전체 인구 대비 농업경영체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순

〈표 3-2〉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포(2022년 9월 기준, 이하 동일)

시군	전체 인구(A)	경영주 농업인 (남자, 명 B)	경영주 농업인 (여자, 명 C)	공동경영주 등록된 자(명, D)	경영주 농업인 합계(명, E=B+C)	경영주 외 농업인(명 F)	농업경영체 (명, G=E+F)	비중(% H=G/A)
천안시	657,559	13,653	4,980	481	18,633	6,927	25,560	3.9%
공주시	102,571	10,980	4,004	231	14,984	7,208	22,192	21.6%
보령시	97,157	9,765	4,158	782	13,923	6,348	20,271	20.9%
아산시	334,539	10,777	3,737	407	14,514	5,265	19,779	5.9%
서산시	176,413	12,676	5,395	218	18,071	8,275	26,346	14.9%
논산시	112,617	11,843	4,585	207	16,428	7,309	23,737	21.1%
계룡시	44,475	834	393	28	1,227	399	1,626	3.7%
당진시	168,253	12,177	4,756	262	16,933	8,011	24,944	14.8%
금산군	50,092	7,839	3,105	2,606	10,944	5,227	16,171	32.3%
부여군	62,343	11,010	4,089	2,797	15,099	7,533	22,632	36.3%
서천군	49,964	7,019	2,926	654	9,945	4,627	14,572	29.2%
청양군	30,266	6,325	2,580	87	8,905	4,297	13,202	43.6%
홍성군	98,068	10,286	4,155	162	14,441	7,064	21,505	21.9%
예산군	77,385	10,562	3,892	881	14,454	6,967	21,421	27.7%
태안군	61,335	7,701	3,781	175	11,482	5,566	17,048	27.8%
충남 전체	2,123,037	143,447	56,536	9,978	199,983	91,023	291,006	13.7%

자료 : 통계청(202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2022.12 기준」(검색일자 : 2023.01.05.).

9) 주 :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여기서 다시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정의, 농업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정의를 말함.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는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성되는데 경영주 외 농업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 고용인 등을 말함.

●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표 3-3〉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의 평균 연령은 68세, 이 중 50대 이하는 44,870명(22.4%), 60대~70대는 114,495명(57.3%), 80대 이상은 40,618명(20.3%)으로 분석
-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이하의 경우 천안시(4,997명), 60대~70대의 경우도 천안시(11,078명), 80대 이상의 경우는 서산시(3,992명)가 많음
- 충청남도 내에서 농업경영체 비중이 높은 지역은 천안시(9.3%), 서산시(9.0%), 당진시(8.5%) 순으로 분석

〈표 3-3〉 충청남도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

시군	연령대별 경영주 농업인 수(명)				연령대별 경영주 농업인 비중(%)				충남 내 비중(%)
	50대 이하	60대 ~ 70대	80대 이상	합계	50대 이하	60대 ~ 70대	80대 이상	합계	
천안시	4,997	11,078	2,558	18,633	26.8%	59.5%	13.7%	100.0%	9.3%
공주시	3,372	8,831	2,781	14,984	22.5%	58.9%	18.6%	100.0%	7.5%
보령시	3,027	7,990	2,906	13,923	21.7%	57.4%	20.9%	100.0%	7.0%
아산시	3,428	8,423	2,663	14,514	23.6%	58.0%	18.3%	100.0%	7.3%
서산시	4,024	10,055	3,992	18,071	22.3%	55.6%	22.1%	100.0%	9.0%
논산시	4,011	9,405	3,012	16,428	24.4%	57.2%	18.3%	100.0%	8.2%
계룡시	386	710	131	1,227	31.5%	57.9%	10.7%	100.0%	0.6%
당진시	3,287	9,786	3,860	16,933	19.4%	57.8%	22.8%	100.0%	8.5%
금산군	2,658	6,263	2,023	10,944	24.3%	57.2%	18.5%	100.0%	5.5%
부여군	3,355	8,542	3,202	15,099	22.2%	56.6%	21.2%	100.0%	7.6%
서천군	1,816	5,677	2,452	9,945	18.3%	57.1%	24.7%	100.0%	5.0%
청양군	2,015	4,884	2,006	8,905	22.6%	54.8%	22.5%	100.0%	4.5%
홍성군	3,462	7,840	3,139	14,441	24.0%	54.3%	21.7%	100.0%	7.2%
예산군	2,965	8,205	3,284	14,454	20.5%	56.8%	22.7%	100.0%	7.2%
태안군	2,067	6,806	2,609	11,482	18.0%	59.3%	22.7%	100.0%	5.7%
충남 전체	44,870	114,495	40,618	199,983	22.4%	57.3%	20.3%	100.0%	100.0%

● 충청남도 전업·겸업¹⁰⁾별 농업경영체 분포(〈표 3-4〉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 중 전업 형태는 149,694명(74.9%), 겸업 형태는 50,289명(25.1%)으로 분석
-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를 살펴보면, 전업 형태가 많은 시군은 서산시(총 13,987명, 시군 내 77.4%), 논산시(13,285명, 80.9%), 당진시(13,011명, 76.8%) 순으로 분석
-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를 살펴보면, 겸업 형태가 많은 시군은 천안시(총 7,507명, 시군 내 40.3%), 아산시(4,839명, 33.3%), 보령시(4,676명, 33.6%) 순으로 분석

〈표 3-4〉 충청남도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

시군	합계(명)	전업 경영주 농업인			겸업 경영주 농업인		
		경영주 농업인(명)	시군 내 비중(%)	순위	경영주 농업인(명)	시군 내 비중(%)	순위
천안시	18,633	11,126	59.7%	7	7,507	40.3%	1
공주시	14,984	11,034	73.6%	8	3,950	26.4%	5
보령시	13,923	9,247	66.4%	10	4,676	33.6%	3
아산시	14,514	9,675	66.7%	9	4,839	33.3%	2
서산시	18,071	13,987	77.4%	1	4,084	22.6%	4
논산시	16,428	13,285	80.9%	2	3,143	19.1%	8
계룡시	1,227	762	62.1%	15	465	37.9%	15
당진시	16,933	13,011	76.8%	3	3,922	23.2%	6
금산군	10,944	8,442	77.1%	12	2,502	22.9%	13
부여군	15,099	12,449	82.4%	4	2,650	17.6%	10
서천군	9,945	7,439	74.8%	14	2,506	25.2%	11
청양군	8,905	7,478	84.0%	13	1,427	16.0%	14
홍성군	14,441	11,186	77.5%	6	3,255	22.5%	7
예산군	14,454	11,597	80.2%	5	2,857	19.8%	9
태안군	11,482	8,976	78.2%	11	2,506	21.8%	11
충남 전체	199,983	149,694	74.9%		50,289	25.1%	

10)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서.

후 : 1. 전업 농가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말함(출처 : 농가경제조사).

2. 겸업 농가란, 1종겸업 농가와 2종겸업 농가로 구분. 1종겸업 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2종겸업 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를 말함(출처 : 농가경제조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 분포(〈표 3-5〉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전체 농지 필지 수는 1,003,527건, 실제 경작면적은 총 1,957,889.3천 m²(195,788.9ha),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은 9,790.3m²(2,961.5 평), 법정동 당 평균 경영주 농업인 수는 702명인 것으로 분석
- 앞서 제3장에서 분석했던 국토교통부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전체 농지 수는 699,987건, 농지면적은 504,474.7천 m² 차이(단, 실제 경작면적과 공부상 농지면적 차이 원인은 휴경, 폐경, 실제경작 여부, 결측치 문제 등으로부터 기인)
- 충청남도 경영주 당 실제 경작면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는 82,168명으로서 41.1% 차지, 평균 이하인 경우는 117,815명으로서 58.9% 차지하여 실제 경작면적 평균 이하의 경영주 농업인이 35,647명 더 많은 것으로 분석

〈표 3-5〉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 분포

시군	전체 농지 필지 수(건)	실제 경작면적 합계(천 m ²)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m ²)	평균 면적 이상		평균 면적 이하	
				경영주 농업인(명)	시군 내 비중(%)	경영주 농업인(명)	시군 내 비중(%)
천안시	53,819	102,321.3	5,491.4	6,788	36.4%	11,845	63.6%
공주시	70,008	133,303.0	8,896.4	6,698	44.7%	8,286	55.3%
보령시	69,619	113,105.0	8,123.6	5,526	39.7%	8,397	60.3%
아산시	59,157	122,698.9	8,453.8	6,525	45.0%	7,989	55.0%
서산시	105,555	233,428.2	12,917.3	6,276	34.7%	11,795	65.3%
논산시	81,684	163,029.1	9,923.9	7,490	45.6%	8,938	54.4%
계룡시	2,224	3,211.9	2,617.7	358	29.2%	869	70.8%
당진시	101,680	215,274.4	12,713.3	7,005	41.4%	9,928	58.6%
금산군	42,783	61,582.9	5,627.1	5,750	52.5%	5,194	47.5%
부여군	81,421	176,995.6	11,722.3	6,096	40.4%	9,003	59.6%
서천군	58,994	111,500.8	11,211.7	4,023	40.5%	5,922	59.5%
청양군	51,502	106,490.9	11,958.5	3,190	35.8%	5,715	64.2%
홍성군	74,835	128,507.0	8,898.8	5,371	37.2%	9,070	62.8%
예산군	83,762	153,768.6	10,638.5	6,493	44.9%	7,961	55.1%
태안군	66,484	132,671.8	11,554.8	4,579	39.9%	6,903	60.1%
충남 전체 (A)	1,003,527	1,957,889.3	9,790.3	82,168	41.1%	117,815	58.9%
비고(B) (국토교통부)	1,703,514	2,462,364.0					
차이 (B-A)	699,987.0	504,474.7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일치 여부(〈표 3-6〉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전체 농지 수는 1,003,527건, 전체 경영주 농업인은 199,983명 중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는 923,247건, 185,358명 (약 92%),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80,280건, 14,625(약 8%)인 것으로 분석
- 충청남도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의 경영주 당 평균 실경작면적은 9,228.0㎡,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동일하지 않는 경우의 경영주 당 평균 실경작면적은 15,206.8㎡인 것으로 분석

〈표 3-6〉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일치 여부

시군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동일한 경우			경영주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동일하지 않는 경우		
	농지 필지 수(건)	경영주 농업인(명)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	농지 필지 수(건)	경영주 농업인(명)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
천안시	44,145	14,996	5,633.4	9,674	3,637	4,905.9
공주시	61,511	13,815	8,615.5	8,497	1,169	12,215.7
보령시	67,204	13,162	8,275.3	2,415	761	5,500.7
아산시	51,874	12,815	8,422.9	7,283	1,699	8,687.2
서산시	99,723	17,088	12,139.1	5,832	983	26,445.1
논산시	72,408	15,422	9,409.6	9,276	1,006	17,807.1
계룡시	1,660	556	4,385.0	564	671	1,153.3
당진시	95,577	16,281	12,342.8	6,103	652	21,964.1
금산군	36,394	10,414	5,062.5	6,389	530	16,721.0
부여군	77,139	14,482	11,584.2	4,282	617	14,965.4
서천군	57,149	9,652	11,221.0	1,845	293	10,906.8
청양군	48,509	8,590	11,607.1	2,993	315	21,541.9
홍성군	71,160	13,276	8,936.1	3,675	1,165	8,473.6
예산군	76,602	13,735	10,191.3	7,160	719	19,180.9
태안군	62,192	11,074	10,594.0	4,292	408	37,633.1
충남 전체	923,247	185,358	9,228.0	80,280	14,625	15,206.8
비중(%)	92.0%	92.7%		8.0%	7.3%	

● 충청남도 자경·임차별 농업경영체 농지 필지 수 분포(〈표 3-7〉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전체 농지 수는 1,278,151건(앞서 서술한 전체 농지 수는 1,003,527건이지만 농지 소재지는 충남이나 관외에 거주하는 것도 포함하여 수치 증가) 중 자경은 58.8%, 임차는 39.8%, 자경과 임차 혼합은 1.4%인 것으로 분석
- 다만, 이 수치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 결과 중 임차농가 비율(51%), 임차농지 비율(47.7%) 값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농지 수 기준으로 자경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천안시(71.5%), 임차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청양군(51.6%), 자경과 임차 혼합 비중이 높은 시군은 아산시(2.4%)인 것으로 분석
- 자경·임차별 농업경영체 농지 필지 수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 자경 농지 필지 수는 예산군, 임차 농지 필지 수는 논산시가, 60대~70대에서는 자경과 임차 모두 서산시, 80대 이상에서는 자경과 임차 모두 서산시인 것으로 분석

〈표 3-7〉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필지 수 분포

시군	50대 이하(건)			60대~70대(건)			80대 이상(건)			시군 내 비중(%)		
	자경	임차	자경+임차	자경	임차	자경+임차	자경	임차	자경+임차	자경	임차	자경+임차
천안시	11,222	4,381	437	35,495	11,732	937	7,534	3,932	239	71.5%	26.4%	2.1%
공주시	12,012	9,688	304	37,141	20,910	756	8,058	6,360	110	60.0%	38.8%	1.2%
보령시	8,756	8,163	335	31,154	22,756	751	9,356	8,471	133	54.8%	43.8%	1.4%
아산시	11,502	5,418	710	37,063	15,683	1,198	9,448	5,264	152	67.1%	30.5%	2.4%
서산시	12,918	10,800	499	48,251	28,084	810	14,791	10,033	200	60.1%	38.7%	1.2%
논산시	11,706	12,266	259	38,525	25,079	613	8,803	6,200	104	57.0%	42.1%	0.9%
계룡시	480	216	26	1,532	579	53	309	229	1	67.8%	29.9%	2.3%
당진시	10,563	9,399	592	44,791	28,080	1,281	13,488	9,320	342	58.4%	39.7%	1.9%
금산군	8,164	4,200	301	23,386	10,005	772	4,715	3,401	356	65.6%	31.8%	2.6%
부여군	10,030	12,614	169	35,164	27,757	402	9,326	7,695	111	52.8%	46.5%	0.7%
서천군	6,084	8,871	194	25,183	23,368	538	8,028	6,355	169	49.9%	49.0%	1.1%
청양군	5,690	7,598	191	18,715	17,649	320	4,937	6,606	62	47.5%	51.6%	0.9%
홍성군	9,326	9,070	235	32,038	20,956	442	10,221	7,781	102	57.2%	41.9%	0.9%
예산군	12,255	9,522	504	42,352	22,135	1,085	12,892	8,568	370	61.5%	36.7%	1.8%
태안군	7,114	6,728	205	32,076	18,400	402	8,972	6,408	83	59.9%	39.2%	0.9%
충남 전체	137,822	118,934	4,961	482,866	293,173	10,360	130,878	96,623	2,534			
비중(%)	10.8%	9.3%	0.4%	37.8%	22.9%	0.8%	10.2%	7.6%	0.2%	58.8%	39.8%	1.4%
비고·농가 (농가경제조사)										48.5%	51.0%	

자료 : 통계청(2021), 농가경제조사 : 농지임대차부문 - 임차농가 비율,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검색일자 : 2022.12.26.).

● 충청남도 자경·임차별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분포(〈표 3-8〉 참고)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전체 농지면적은 2,504,473.7천 m²(앞서 서술한 전체 농지면적은 1,957,889.3천 m²이지만 농지 소재지는 충남이나 관외에 거주하는 것도 포함하여 수치 증가) 중 자경은 55.4%, 임차는 43.2%, 자경과 임차 혼합은 1.5%인 것으로 분석
- 다만, 이 수치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 결과 중 임차농가 비율(51%), 임차농지 비율(47.7%) 값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농지면적 기준으로 자경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천안시(68.4%), 임차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청양군(54.7%), 자경과 임차 혼합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천안시(2.7%)인 것으로 분석
- 자경·임차별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경과 임차 모두 서산시인 것으로 분석

〈표 3-8〉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면적 분포

시군	50대 이하(천 m ²)			60대~70대(천 m ²)			80대 이상(천 m ²)			시군 내 비중(%)		
	자경	임차	자경+임차	자경	임차	자경+임차	자경	임차	자경+임차	자경	임차	자경+임차
천안시	20,061.6	9,366.1	916.1	63,533.0	24,280.7	2,293.0	13,950.4	7,486.1	697.3	68.4%	28.8%	2.7%
공주시	19,517.9	21,255.4	595.9	65,886.4	48,611.8	1,899.6	13,731.7	11,946.8	243.6	54.0%	44.5%	1.5%
보령시	14,460.1	14,898.7	639.4	47,984.7	38,288.4	1,297.1	13,285.7	12,309.0	253.2	52.8%	45.7%	1.5%
아산시	21,172.8	12,620.2	1,396.6	70,707.4	34,196.0	2,590.7	17,919.6	10,217.5	428.1	64.1%	33.3%	2.6%
서산시	29,928.3	35,432.4	1,155.4	100,195.7	67,875.7	2,091.2	26,518.1	18,245.4	523.6	55.6%	43.1%	1.3%
논산시	22,534.5	29,950.6	515.6	74,805.5	53,027.3	1,411.4	15,742.2	10,923.9	182.2	54.1%	44.9%	1.0%
계룡시	626.8	370.0	34.7	2,544.4	914.0	72.6	452.8	352.3	1.4	67.5%	30.5%	2.0%
당진시	21,889.7	23,879.5	1,308.0	91,308.7	64,634.0	2,610.1	25,770.1	18,241.6	703.2	55.5%	42.6%	1.8%
금산군	12,040.4	6,689.7	462.7	36,091.2	15,237.8	1,147.5	6,890.6	4,889.3	524.6	65.5%	31.9%	2.5%
부여군	22,710.4	32,337.0	439.3	75,938.8	66,714.0	973.8	16,874.1	14,866.6	275.9	50.0%	49.3%	0.7%
서천군	11,458.6	19,344.9	366.0	43,503.1	46,805.0	926.7	11,438.2	9,092.4	338.5	46.3%	52.5%	1.1%
청양군	12,496.1	19,732.9	376.1	38,839.7	40,450.2	603.0	9,034.2	14,141.7	148.6	44.4%	54.7%	0.8%
홍성군	17,195.1	19,106.2	471.5	54,455.4	37,732.9	905.3	15,154.7	11,484.7	173.2	55.4%	43.6%	1.0%
예산군	23,358.3	21,264.6	957.6	75,969.8	44,373.4	1,933.7	21,174.4	14,037.6	697.4	59.1%	39.1%	1.8%
태안군	14,172.2	19,879.8	442.3	58,759.0	42,290.5	831.3	14,440.5	11,104.6	196.2	53.9%	45.2%	0.9%
충남 전체	263,622.9	286,128.0	10,077.4	900,522.6	625,431.9	21,587.0	222,377.2	169,339.6	5,387.1	55.4%	43.2%	1.5%
비중(%)	10.5%	11.4%	0.4%	36.0%	25.0%	0.9%	8.9%	6.8%	0.2%	55.4%	43.2%	1.5%
비고: 농지 (농가경제조사)											47.7%	

자료 : 통계청(2021), 농가경제조사 : 농지임대차부문 - 임차농가 비율,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검색일자 : 2022.12.26.)

● 충청남도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분포(〈표 3-9〉 참고)

- 충청남도에 농지를 두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는 21,292명, 이들의 농지 필지 수는 63,486건, 실제 경작면적은 총 173,277.2천 m², 경영주 당 실제 경작면적은 8,138.1m²(2,461.8평)
- 충청남도에 농지를 두면서 관외 거주하는 경영주 농업인 수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순, 농지 필지 수와 실제 경작면적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순
- 충청남도 내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면적 비중은 경기도 32.2%, 대전광역시 28.3%, 세종특별자치시 11.6%, 서울특별시 8.1%, 전라북도 7.4% 등으로 분석
- 충남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면적 중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면적은 8.9% 차지
- 이는 앞서 제3장에서 분석했던 ‘관외 거주자 면적 비중인 28.5%~30.4%’와 큰 차이

〈표 3-9〉 관외 거주하는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포

시도	경영주 농업인(명)	농지 필지수(건)	실제 경작면적 합계(천 m ²)	충남 내 실제 경작면적 비중(%)	경영주 당 실제 경작면적(m ²)	실제 경작면적 합계 순위
경기도	5,855	19,363	55,743.3	32.2%	9,520.6	1
대전광역시	8,026	18,791	49,022.6	28.3%	6,108.0	2
세종특별자치시	2,376	8,103	20,146.7	11.6%	8,479.2	3
전라북도	793	4,816	12,883.9	7.4%	16,247.0	5
서울특별시	1,983	4,672	14,026.6	8.1%	7,073.4	4
충청북도	721	3,201	8,241.2	4.8%	11,430.3	6
인천광역시	993	2,446	7,213.4	4.2%	7,264.3	7
전라남도	80	546	2,132.8	1.2%	26,659.4	8
경상북도	113	483	1,157.2	0.7%	10,240.9	9
강원도	101	411	1,091.1	0.6%	10,803.4	10
경상남도	73	215	523.5	0.3%	7,171.6	11
광주광역시	49	118	274.2	0.2%	5,595.8	13
제주특별자치도	35	103	311.5	0.2%	8,899.8	12
대구광역시	32	99	220.2	0.1%	6,882.1	14
부산광역시	34	68	170.7	0.1%	5,020.6	15
울산광역시	28	51	118.3	0.1%	4,223.6	16
총합계(A)	21,292	63,486	173,277.2	100.0%	8,138.1	
충남 전체 실제 경작면적(B)(천 m ²)			1,957,889.3			
B/A(비중, %)			8.9%			

04 농업 지원정책 실태분석

1. 제도 이해

- 대표적 농업 지원정책인 국가의 공익직불금, 충남의 농어민수당(〈표 4-1〉 참고)
 - 이 두 사업의 공통지점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면적 농지를 경작하는 자

〈표 4-1〉 국가의 공익직불금과 충남의 농어민수당 개요

구분	지원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1)	지원자격 및 요건(2)	충남의 지급 실적(2021년)
국가의 공익직불금(기본형)	· (면적 직불금) 농지면적 기준 지급 · (소농 직불금) 0.5ha 이하 소농에게 120만 원 지급	·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2023년부터 이 조건은 폐지될 예정(법개정)	· '16~'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자	162,459명 (165,660ha) 3,480억 원
충남의 농어민수당	·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 원 지급	·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하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159,846호 1,278억 원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2.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3. 충청남도의회(2022), 이공휘 의원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자료(농지대장 등, 2022년 6월 기준).
 주 : 이하에서 언급하는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 중에서 기본형을 의미함.

● 국가의 공익직불금 주요 내용¹¹⁾(〈표 4-2〉 참고)

-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 실경작 여부 등 집중 확인하여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 통합검증시스템이란,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함.
-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 4천 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 2023년부터 시행

〈표 4-2〉 국가의 공익직불금 세부 내용(2022년)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지를 기준으로 면적 직불금 지급하되 농지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 농가 단위 소농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자 등,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 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 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면적 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 적용하여 농지면적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지급, (소농 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 원 지급 - 지원 기준 및 '22년 예산 : 국비 100%, 2,280,487백만 원
○ 사업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대상자 선정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 등 자격요건 검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안내서.

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23.),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 10월 21일부터 113만 농업인에게 총 2조 1,943억 원 지급.

● 충청남도의 농어민수당 주요 내용¹²⁾(〈표 4-3〉 참고)

- 사업시행 : 15개 시군
- 사업량 : 250,000명(농업·축산업·임업인 242,444, 어업인 7,556)
- 사업비 : 144,750백만 원(도 57,900, 시군 86,850), 비율(도비 40%, 시군비 60%)
- * 도 농림축산국(식량원예과) 140,375백만 원,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4,375백만 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80만 원 지역화폐 지급(상·하반기 분할 지급),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표 4-3〉 충남의 농어민수당 세부 내용(2022년)

공통조건 (모두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어업경영체는 신청 종료일('22. 6. 30.)기준 경영체등록 여부로 확인(대체) ○ 20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21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 확인은 '22. 7. 1.이후 가능함에 따라 '20년도 자료 활용)
추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사육장(양봉포함) 등이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2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洞지역 거주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동일 시 지역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1호의 가, 나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민등록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나. 연간 농산물(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이행조건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농·수·임·축산물의 생산(공급), 국토 및 자연 환경의 보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 농림어업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농산어촌 사회 유지 -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 등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2.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

향후 발간예정인 정책지도(안)

● 분석개요(안)

- 발간물 : (가칭) 충남 농업 지원정책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3-00호 통권 00호, 충남연구원(2023년 상반기 발간 예정)
- 내용 : 농업경영체의 농업 지원정책(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등) 지급 현황 등을 공간적으로 분석

● 분석자료(안) : 사용한 기초데이터, 데이터 생성한 기관, 집계 기준시점

- 토지소유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발데이터, 2022년 7월 기준, 사용예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9월 기준, 사용예정)
- 충청남도(2023.03.), 공익형 직불제 지급내역(2022년 12월 기준, 사용예정)
- 충청남도(2022.03.), 농어민수당 지급내역(2022년 12월 기준, 사용예정)
- 충남 1:5,000 연속 수치지형도 도로망 레이어(국토지리정보원, 사용예정)
- 충남 행정통계(통계청의 SGS 공간통계 서비스, 사용예정)

● 분석내용(예정, 안)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규모 분포, 연령별·성별 농어민수당 지원규모 분포, 경작면적별 농어민수당 지원규모 분포, 자경 및 임차 유형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원규모 분포, 경작지 주소, 거주지 주소 차이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원규모 분포, 농지소유여부, 동일세대 내 농어민수당 지원규모 분포 등(분석예정인 내용)

현재 현황분석 중심의 한글보고서

● 분석자료(현재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안내서.
-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23.),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 10월 21일부터 113만 농업인에게 총 2조 1,943억 원 지급.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 충청남도(2022.12.), 공익형 직불제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 충청남도(2022.12.), 농어민수당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 충청남도의회(2022), 이공휘 의원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자료(농지대장 등, 2022년 6월 기준)

● 분석내용(현재 보고서)

- 국가 공익직불금 : 국가 공익직불금 총괄 현황,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총괄 현황,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지급 현황, 충청남도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른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총괄 현황, 충청남도 시군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
- 농업경영체-농업 지원정책 대상 일치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와 농업 지원정책 대상자 차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와 공익직불금 지급농지 차이

3. 분석결과

국가 공익직불금

- 국가 공익직불금 총괄 현황(〈표 4-4〉 참고)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2022년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규모는 총 2조 1,943억 원, 지급대상 규모는 112,900명, 지급면적은 105만 8천 ha 지급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 지급

〈표 4-4〉 국가 공익직불금 총괄 현황(2022년)

구 분	지급액(억 원)	지급면적(천 ha)	지급인원 (천 호, 천 명)	비 고
소농 직불금	5,405	144	450	농가 기준
면적 직불금	16,538	914	679	농업인 기준
합계	21,943	1,058	1,12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23.),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 10월 21일부터 113만 농업인에게 총 2조 1,943억 원 지급.

-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총괄 현황(〈표 4-5〉 참고)
 - 2021년 기준,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62,459명, 지급면적은 165,660ha
 -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총 348,047백만 원, 충남 내 지급액 비중으로 가장 높은 시군은 서산시 12.8%, 당진시 11.6%, 논산시 8.4% 순으로 분석
 - 1인당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214.2만 원, ha당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210만 원

〈표 4-5〉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총괄 현황(2021년)

시군	공익직불금 총합계(=소농 직불금+면적 직불금)					
	지급대상(명)	지급면적(ha)	지급액(백만 원)	충남 내 지급액 비중(%)	1인당 지급액(원)	ha당 지급액(원)
천안시	10,358	7,649	15,838	4.6%	1,529,059.7	2,070,597.5
공주시	11,063	8,369	19,946	5.7%	1,802,946.8	2,383,319.4
보령시	10,758	9,868	21,502	6.2%	1,998,698.6	2,178,962.3
아산시	10,642	10,033	20,748	6.0%	1,949,633.5	2,067,975.7

시군	공익직불금 총합계(=소농 직불금+면적 직불금)					
	지급대상(명)	지급면적(ha)	지급액(백만 원)	충남 내 지급액 비중(%)	1인당 지급액(원)	ha당 지급액(원)
서산시	14,858	22,870	44,512	12.8%	2,995,827.2	1,946,305.2
논산시	13,530	14,029	29,371	8.4%	2,170,805.6	2,093,591.8
계룡시	444	191	468	0.1%	1,054,054.1	2,450,261.8
당진시	13,992	20,314	40,515	11.6%	2,895,583.2	1,994,437.3
금산군	8,260	4,578	11,255	3.2%	1,362,590.8	2,458,497.2
부여군	12,940	13,964	32,097	9.2%	2,480,448.2	2,298,553.4
서천군	8,333	10,156	21,886	6.3%	2,626,425.1	2,154,982.3
청양군	7,539	7,173	15,188	4.4%	2,014,590.8	2,117,384.6
홍성군	11,176	11,179	23,298	6.7%	2,084,645.7	2,084,086.2
예산군	19,204	13,656	28,094	8.1%	1,462,924.4	2,057,264.2
태안군	9,362	11,631	23,329	6.7%	2,491,892.8	2,005,751.8
충남 전체	162,459	165,660	348,047	100.0%	2,142,368.8	2,100,971.2
(천 m ² 환산)		1,656,600.0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면적(천 m ²)		1,957,889.3				

자료 : 1. 충청남도(2022.12.), 공익형 직불제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2. 충청남도의회(2022), 이공휘 의원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자료(농지대장 등, 2022년 6월 기준).

주 : 2개 자료로부터 수치 차이가 나는 지역은 공주시(지급금액에서 18억 원 차이), 부여군(지급금액에서 25억 원 차이), 예산군(지급대상자수에서 6,392명 차이)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함.

●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지급 현황(〈표 4-6〉 참고)

- 2021년 기준, 충청남도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은 57,486명, 지급면적은 18,416ha, 지급액은 68,690백만 원
- 2021년 기준, 충청남도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은 104,973명, 지급면적은 147,244ha, 지급액은 279,357백만 원
- 충청남도 공익직불금 지급액 중 소농 직불금은 전체의 19.7% 차지, 면적 직불금은 80.3% 차지
- 소농 직불금 지급액 비중에서 가장 높은 시군은 계룡시 53.8%, 금산군 49.5%
- 면적 직불금 지급액 비중에서 가장 높은 시군은 서산시 88.2%, 당진시 88.4%

● 충청남도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른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표 4-7〉 참고)

- 2021년 기준,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62.1%, 비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19.3%, 비농업진흥지역 밭의 경우 15.5%, 농업진흥지역 밭의 경우 3.0% 순인 것으로 분석

〈표 4-6〉 충청남도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지급 현황(2021년)

시군	소농 직불금(A)			면적 직불금(B)			소농 직불금 비중 (%A)	면적 직불금 비중 (%B)	합계(%)
	지급대상 (명)	지급면적 (ha)	지급액 (백만 원)	지급대상 (명)	지급면적 (ha)	지급액 (백만 원)			
천안시	3,369	1,127	3,946	6,989	6,522	11,892	24.9%	75.1%	100.0%
공주시	4,535	1,494	5,442	6,528	6,875	14,504	27.3%	72.7%	100.0%
보령시	4,102	1,196	4,919	6,656	8,672	16,583	22.9%	77.1%	100.0%
아산시	3,159	1,028	3,786	7,483	9,005	16,962	18.2%	81.8%	100.0%
서산시	4,367	1,501	5,240	10,491	21,369	39,272	11.8%	88.2%	100.0%
논산시	4,587	1,503	5,502	8,943	12,526	23,869	18.7%	81.3%	100.0%
계룡시	222	65	252	222	126	216	53.8%	46.2%	100.0%
당진시	3,966	1,345	4,704	10,026	18,969	35,811	11.6%	88.4%	100.0%
금산군	4,647	1,431	5,575	3,613	3,147	5,680	49.5%	50.5%	100.0%
부여군	4,983	1,554	5,979	7,957	12,410	26,118	18.6%	81.4%	100.0%
서천군	3,679	1,047	4,377	4,654	9,109	17,509	20.0%	80.0%	100.0%
청양군	3,059	936	3,605	4,480	6,237	11,583	23.7%	76.3%	100.0%
홍성군	4,490	1,438	5,388	6,686	9,741	17,910	23.1%	76.9%	100.0%
예산군	4,469	1,487	5,353	14,735	12,169	22,741	19.1%	80.9%	100.0%
태안군	3,852	1,264	4,622	5,510	10,367	18,707	19.8%	80.2%	100.0%
충남 전체	57,486	18,416	68,690	104,973	147,244	279,357	19.7%	80.3%	100.0%

자료 : 충청남도(2022.12.), 공익형 직불제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표 4-7〉 충청남도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른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2021년)

시군	농업진흥지역 등 지급면적 비중(%)				
	농업진흥지역(논)	농업진흥지역(밭)	비농업진흥지역(논)	비농업진흥지역(밭)	비중(%)
천안시	47.7%	8.7%	20.3%	23.3%	100.0%
공주시	50.1%	2.0%	32.1%	15.8%	100.0%
보령시	66.7%	3.1%	17.7%	12.5%	100.0%
아산시	62.0%	4.1%	18.5%	15.4%	100.0%
서산시	62.8%	3.5%	18.6%	15.2%	100.0%
논산시	67.1%	2.1%	21.8%	9.0%	100.0%
계룡시	0.0%	0.0%	79.2%	20.8%	100.0%
당진시	68.1%	0.8%	19.2%	12.0%	100.0%
금산군	44.6%	2.8%	28.2%	24.4%	100.0%
부여군	69.3%	1.0%	19.1%	10.6%	100.0%
서천군	75.7%	1.6%	13.6%	9.0%	100.0%
청양군	57.5%	1.7%	22.1%	18.6%	100.0%
홍성군	56.9%	2.2%	20.5%	20.4%	100.0%
예산군	61.3%	7.0%	13.0%	18.7%	100.0%
태안군	55.1%	3.8%	16.1%	25.0%	100.0%
충남 전체	62.1%	3.0%	19.3%	15.5%	100.0%

자료 : 충청남도(2022.12.), 공익형 직불제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총괄 현황(〈표 4-8〉, 〈표 4-9〉 참고)

- 2021년 기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159,846호, 지급액은 127,874백만 원
- 지급액 중 도비는 40%를 부담하여 51,150백만 원, 시군비는 76,724백만 원 집행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액이 많은 시군은 서산시 14,859호(충남 전체 지급액의 9.3%), 당진시 14,011호(8.8%), 논산시 13,199호(8.3%) 순으로 분석

〈표 4-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계획(2020년~2024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백만 원)	128,000	132,000	144,750	144,750	144,750
도비(백만 원)	54,400	52,800	57,900	57,900	57,900
시군비(백만 원)	73,600	79,200	86,850	86,850	86,850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 : 도 전체 사업비(어민 예산 포함), '22년 이후 재정투입 계획은 변경(증액) 될 수 있음.

〈표 4-9〉 충청남도 시군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2021년)

시군	지급대상(호)	순위	지급액			
			계(백만 원)	도비(백만 원)	시군비(백만 원)	충남 내 비중(%)
천안시	11,583	8	9,266	3,706	5,560	7.2%
공주시	11,218	9	8,974	3,590	5,384	7.0%
보령시	12,385	5	9,908	3,963	5,945	7.7%
아산시	10,510	11	8,408	3,363	5,045	6.6%
서산시	14,859	1	11,887	4,755	7,132	9.3%
논산시	13,199	3	10,559	4,224	6,335	8.3%
계룡시	630	15	503	201	302	0.4%
당진시	14,011	2	11,208	4,483	6,725	8.8%
금산군	8,420	13	6,735	2,694	4,041	5.3%
부여군	12,749	4	10,199	4,080	6,119	8.0%
서천군	8,610	12	6,888	2,755	4,133	5.4%
청양군	7,402	14	5,922	2,369	3,553	4.6%
홍성군	11,612	7	9,290	3,716	5,574	7.3%
예산군	11,950	6	9,560	3,824	5,736	7.5%
태안군	10,708	10	8,567	3,427	5,140	6.7%
충남 전체	159,846		127,874	51,150 (40.0%)	76,724 (60%)	100.0%

자료 : 1. 충청남도(2022.12.), 농어민수당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2. 충청남도의회(2022), 이공희 의원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자료(농지대장 등, 2022년 6월 기준).

농업경영체-농업 지원정책 대상 일치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와 농업 지원정책 대상자 차이(〈표 4-10〉 참고)

-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은 199,983명,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159,846호(명),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62,459명인 것으로 분석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간 차이는 40,137명(전체 대비 79.9%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간 차이는 37,524명(전체 대비 81.2% 지원)
- 데이터별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차이 발생 원인은 보완자료를 통한 추가 분석 필요, 이 지점은 현행 법과 제도 상에서 놓치는 공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가려지게 됨.

〈표 4-10〉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와 농업 지원정책 대상자 차이(2021년)

시군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명, A)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호, B)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명, C)	농업경영체- 농어민수당 (명, A-B)	농업경영체- 공익직불금 (명, A-C)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비중(% B/A)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비중(% C/A)
천안시	18,633	11,583	10,358	7,050	8,275	62.2%	55.6%
공주시	14,984	11,218	11,063	3,766	3,921	74.9%	73.8%
보령시	13,923	12,385	10,758	1,538	3,165	89.0%	77.3%
아산시	14,514	10,510	10,642	4,004	3,872	72.4%	73.3%
서산시	18,071	14,859	14,858	3,212	3,213	82.2%	82.2%
논산시	16,428	13,199	13,530	3,229	2,898	80.3%	82.4%
계룡시	1,227	630	444	597	783	51.3%	36.2%
당진시	16,933	14,011	13,992	2,922	2,941	82.7%	82.6%
금산군	10,944	8,420	8,260	2,524	2,684	76.9%	75.5%
부여군	15,099	12,749	12,940	2,350	2,159	84.4%	85.7%
서천군	9,945	8,610	8,333	1,335	1,612	86.6%	83.8%
청양군	8,905	7,402	7,539	1,503	1,366	83.1%	84.7%
홍성군	14,441	11,612	11,176	2,829	3,265	80.4%	77.4%
예산군	14,454	11,950	19,204	2,504	-4,750	82.7%	132.9%
태안군	11,482	10,708	9,362	774	2,120	93.3%	81.5%
충남 전체	199,983	159,846	162,459	40,137	37,524	79.9%	81.2%

주 :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1인이므로 다른 데이터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1명으로 간주, 계산함.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와 공익직불금 지급농지 차이(〈표 4-11〉 참고)

-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데이터 상 농지면적은 결측치 포함했을 때 2,462,364.0천 m², 결측치 포함하지 않았을 때 2,184,434.7천 m², 연령대별 농지면적은 1,793,437.6천 m²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 상 실제 경작면적은 1,957,889.3천 m², 임대차별 농지면적은 2,504,473.3천 m², 그리고 공익직불금 데이터 상 지급면적은 1,656,600.0천 m²
- 최대 면적(토지소유정보서비스 데이터 상 결측치를 포함한 농지면적)과 최소 면적(공익직불금 데이터 상 지급면적) 간 차이는 805,764천 m²로서 전체 농지의 약 67.3%가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
- 데이터별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차이 발생 원인은 보완자료를 통한 추가 분석 필요, 이 지점은 현행 법과 제도 상에서 농지는 공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가려지게 됨.

〈표 4-11〉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와 공익직불금 지급농지 차이(2021년)

시군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데이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		공익직불금 데이터	면적 차이 (%) G=F/A
	농지면적 (결측치 포함, 천 m ² , A)	농지면적 (결측치 미포함, 천 m ² , B)	연령대별 농지면적 (결측치 미포함, 천 m ² , C)	실제 경작면적 (천 m ² , D)	임대차별 농지면적 (천 m ² , E)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천 m ² , F)	
천안시	159,864.1	136,696.5	113,043.1	102,321.3	142,584.3	76,490.0	47.8%
공주시	155,609.8	137,667.0	107,178.5	133,303.0	183,689.1	83,690.0	53.8%
보령시	144,314.4	130,849.0	109,828.0	113,105.0	143,416.3	98,680.0	68.4%
아산시	183,461.9	158,106.3	127,150.2	122,698.9	171,248.9	100,330.0	54.7%
서산시	269,992.4	232,302.0	190,323.9	233,428.2	281,965.8	228,700.0	84.7%
논산시	201,451.5	183,285.0	153,561.1	163,029.1	209,093.2	140,290.0	69.6%
계룡시	6,154.7	5,211.2	2,996.1	3,211.9	5,369.0	1,910.0	31.0%
당진시	281,359.0	248,455.7	202,353.6	215,274.4	250,344.9	203,140.0	72.2%
금산군	106,113.7	93,877.9	79,895.2	61,582.9	83,973.8	45,780.0	43.1%
부여군	190,180.8	174,417.5	141,496.8	176,995.6	231,129.9	139,640.0	73.4%
서천군	138,452.9	123,455.7	104,113.9	111,500.8	143,273.4	101,560.0	73.4%
청양군	104,719.7	93,901.5	71,093.6	106,490.9	135,822.5	71,730.0	68.5%
홍성군	159,143.2	142,736.5	123,969.2	128,507.0	156,679.0	111,790.0	70.2%
예산군	187,985.8	170,148.1	146,928.6	153,768.6	203,766.8	136,560.0	72.6%
태안군	173,560.1	153,324.9	119,505.8	132,671.8	162,116.4	116,310.0	67.0%
충남 전체	2,462,364.0	2,184,434.7	1,793,437.6	1,957,889.3	2,504,473.3	1,656,600.0	67.3%

주 :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가구 당 지급하므로 별도의 농지면적 데이터는 집계하지 않고 있음.

05 결론

1. 농지 및 농업경영체의 정책과제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분포로부터 도출한 정책과제〉

● 농지 문제로부터 도출한 정책과제 요약

- 민선 8기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중요 정책과제는 여성농민, 청년농민, 귀농·귀향 농민, 불법임대차 거래시장에 노출된 농민 등을 위해서 ‘농지’ 기반 체계부터 제도화
-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려는 자정 노력을 통해서 농민들로부터 신뢰 얻는 것

● ① 농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 국회에 농지관련 법률 제·개정 제안

-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늘어나는 예외적인 소유조항(상속농지, 주말체험 농지, 이농농지 등)을 줄여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농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 개정
- 농지소유는 물론 농지이용, 농지보전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 2022.04.01.)」 제정
- 관외 소유자 중 가짜 농업인 및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차이에 대한 현실과 법률 간극 최소화,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필요

● ② 농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 중앙정부에 농지관련 제도개선 제안

- 분석에 사용된 정부 자료는 농지소유와 관련된 정보로서 충청남도 실제 농지 임대차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농지 임대차 및 농지전용 현황 등 세부 정보 공개 필요
- 국유 농지 및 공유 농지 이용실태 파악,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차거나 실습농장 제공 등 제도 개선

- 청년농업인에게 공공임대 비축농지 대폭 확대, 농지수요(쓸 만한 농지, 접근성 좋은 농지 등)에 맞는 농지공급 체계 도입
- 고령농업인에게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농지로부터 점진적인 경영이양 유도

● ③ 농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 충청남도 및 시군이 실천할 정책과제

- 충청남도 및 시군의 공유 농지 이용실태 파악,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하거나 실습농장 제공 등 제도 개선
- 관련 근거로서 충청남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개정 노력
- 마을 주민들이 (마을 농지)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구축, 실질적인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작동
- 이렇게 활용되는 공유 농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사방식 도입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 실행

● 농업경영체 문제로부터 도출한 정책과제

①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중화 제도 개선

- 농업경영체 중 남성 경영주의 편중화(남자 경영주 71.7%, 여자 경영주 28.3%), 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이면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만 농업경영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제도 개선 필요

② 연령에 맞는 농업경영체 지원 차등화 정책과제 필요

- 농업경영체가 고령화(충남 경영주 평균연령 68세)됨에 따라서 연령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차등화하는 정책과제 필요

③ 전업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전망 확충 정책과제 필요

- 농업소득(충남 평균 농업소득 1,400만 원 수준, 202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업농 못지않게 겸업농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전체적으로 전업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실행 필요

④ 농지 임대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필요

- 지역별 농업경영체 고령화도 자경과 임차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농업경영체의 연령별 임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층에는 농사지을 땅을 제공하는 정책과제, 은퇴층에는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정책과제 필요

⑤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실제 경작인증 정책과제 필요

- 관외 거주하는 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면적 비중은 약 8.9%로서 주로 대도시인 경기, 대전, 세종 등에 거주하고 임차보다 자경 비율이 높는데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인정하는 충남만의 정책설계 필요

2. 데이터 및 정보측면의 정책과제

● ① 농지와 농업경영체 데이터 및 정보의 정책과제

-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투명한 정보공개)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시행한다고 하지만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오류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투명한 정보공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핵심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농지임대차, 농지소유자명, 주민등록 지번주소지 등 핵심사항은 파악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
-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큰 한계점이자 정책과제로 도출

※ 선행연구 : 김관수 외(2019),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³⁾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나 개별 정책사업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없어서 개별 사업과 수령자 매칭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동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부여하는 번호로는 개별 농업인의 보조금 수령 실적이나 종류 등을 심층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함.
- 이외에도 농업경영체 DB와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어렵고 농업경영체 DB 자체를 적시에 현행화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들었고, 이에 기존 인식번호 부여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고유식별번호 도입방안 제안

● ② (공공성) 데이터 및 정보는 공공성, 공적 재산, 공공재라는 인식

-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공공재, 공공 재산, 공적 자산이다.”임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개인의 사유재가 아니기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산 기반임을 인식
- 공적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련 농축산분야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주요한 명분이 되는 지점으로서 최근 ‘개인정보’를 이유로 데이터를 취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도와 같은 광역단위는 이러한 이유로 세부 (속성이 있는) 데이터가 없고 총괄합산된 자료만 있는 경우가 허다
-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조금 수혜를 받는 이들 정보는 공공정책 실현을 위해서, 공공목적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 하에 가려지는 정보들이 많지만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13) 자료 : 김관수,이태호,안동환,조정찬(2020),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계점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어려움을 겪었음.

- 가명정보 특례법에 의한 처리기관도 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에서의 활용은 한계가 뚜렷이 존재
- 조례를 통해서 공공 정책의 활용목적을 위한 정보라면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예외조항으로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음. 이것은 시장.군수.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달린 문제이라고 보는 시각 존재

※ 법적 근거 : 데이터기반행정부에 의거한 데이터 제공 및 활용

-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자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부)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 ③ (개방성, 공유성) 공공성에 입각한 데이터들은 개방과 공유 필수

- 담당자(연구자 포함)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데 공공재산인 데이터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고 이용코자 하는 이들에게 개방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함.
- 어떤 부서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know where) 조사, 자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성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조사,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등 농축 산업 분야와 관련한 일체 자료와 데이터 목록화 필요
- 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 정보가 ‘데이터 댐’에 모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 충청남도도 충청남도데이터포털 ‘올담’

※ 법적 근거 : 농식품부의 데이터 관리 규정¹⁴⁾

- 2022년 8월 제정된 훈령인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마련으로 데이터 정책수립 기반 마련, 이에 근거하여 농식품 데이터 민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작
-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농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의하는 회의체
- 그동안 농식품 분야 데이터 진단 및 품질관리를 위해 농식품 데이터 관련 규정 제정,

1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2.07.), 민·관이 함께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 농식품부, 제1회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

농식품 부내 협의체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데이터 활용, 제도개선 등에서 전문가들과의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 ①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②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농업경영체 정보 개방방안, ③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위한 농작업 표준코드 제정안 등 논의
-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농식품 분야 데이터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별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 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정책 수립 계획

제4장 농식품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제15조(데이터 등록·제공)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2.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제16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데이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
3.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시행 2022. 8. 1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39호, 2022. 8. 12. 제정].

● ④ (목적 지향성) 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목적은 처음부터 명확

-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 변화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활동은 정책수립, 제도개선 목적을 분명히 지향해야 함.
- 생산된 최종결과물이 정책수립에, 정책설계에 반영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하므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단계부터 왜 하는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염두에 둬야 함.
- 예를 들면, “현행 헌법 상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일치해야 농민인데 각종 직불금과 수당에서 부당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지점인가, 누수되는 농업경영체는 어떤 경우인가,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식을 가지고 농지 데이터,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분석

● ⑤ (가치,활용성)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

- 모든 데이터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해야 하는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

- 생산된 최종결과물은 정책수립 및 정책설계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비로소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동의 가치가 빛 발휘 가능
- 생산된 최종결과물을 기반으로 분석작업, 시각화작업, 홍보작업, 피드백 작업 등도 부지런히 함. 대부분 보고서와 같은 2차원적 분석결과, 평면적 분석결과는 그 위기의 심각성 및 실태의 심각성 등을 인지하는데 빠르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결국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

● ⑥ (융복합성, 종합성) 나홀로 데이터가 아닌 “같이 데이터”가 효력 발휘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간 결합, 융복합은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치 못했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정보 생성 가능
- 현재 사회는 복잡한 구조(원인과 결과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고 여러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이므로 농축산업 분야도 보다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농축산업 분야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

● ⑦ (상호 피드백 과정, 상호 연관성, 상호 교류성) 데이터를 통한 도민과의 상호 공감 활동, 교류 활동

- 지금은 시민이 전문가인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한 도민과의 상호 공감 활동, 교류 활동도 필요, 지역패널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상호 피드백을 하는 등 데이터를 매개로 한 관계성 맺기 활동도 중요
-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현재 위기, 현재의 실태, 현재의 상황을 모든 이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주도민과의 끊임없는, 촘촘한, 단단히 구축된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언론사,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업활동, 알리기(홍보)전략도 중요, 예를 들면, 홍보 전략으로서 지역언론사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활동, 주제별 특집기사 시리즈 발간, 전달창구로서 지역 패널을 선정하는 것도 방법

● ⑧ (기반 구축) 데이터를 다루는 곳은 일원화, 통합화 될수록 효력 발휘

- 산재된 데이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다루는 “조직과 인력, 예산 기반”은 필수
- 충청남도, 농식품부, 농정원과 같은 데이터 전문기관 간 연계 활동을 제도화할 필요, 정보의 업데이트 작업은 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지속적 필요
-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물론 통계 모델링, 예측과 전망까지 진행해야 한다. 정량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외에 정성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상시 설문조사, 의향조사 등을 병행하고 그 의식조사 결과조차도 센터에 일괄 축적

- 위에 말한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할 것인가,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조직과 인력 뒷받침은 필수
- 행정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되는 환경 속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기 힘들기에 데이터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유지보수 진행할 조직과 인력 상시 체계 구축 절실

※ 참고 사례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농업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그림 5-1> 참고)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으로서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자료인 농촌에 대한 자료 제공은 없는 상태
- 농업경영체 및 농지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원자료 제공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농업 데이터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한 자료 구축을 통한 농지 공간정보 구축은 다양한 농업 연구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기여
- 특정 개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인구, 지역특색 등 농지 및 농업경영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간적으로 중첩하여 인사이트 발굴하였다는 데 기여

<그림 5-1>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 : 농산어촌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누리집(RAISE,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검색일자 : 2022.12.28.)

3. 의의와 한계

- **충남 정책지도의 의의** : [융복합 데이터], [공간화], [시각화], [정보 구축]
 - 농업정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실증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정밀한 필지기반 스케일의 농지, 농업 경영체, 보조금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최하위 공간단위의 지자체 농업정책현황 및 제반정보를 추출하고자 하였다는 점
 - 공공 및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체별·지역별 현황 파악 가능
 - 공간적으로 농업경영체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 가능
 - 농축산분야 데이터와 관련한 다른 분야 데이터를 연계,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점
 - 충남 15개 시군은 물론 시군별 읍면동, 행정리 단위까지 시공간 분포로서 분석한 점
 - 공간속성 정보 등 깊고 세부적인 단위까지 표시되는 원데이터 소스 수집, 확보한 점
 - 분석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지도 형태와 인포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했다는 점

- **충남 정책지도의 한계** : 사용한 데이터 및 정보 한계(개인정보보호로 인한 내용 미흡)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수록된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정확한 자료제공, 폭넓은 자료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분석에 돌입
 -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데이터 정보공개의 한계,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충청남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정보간 연결성 부족, 즉, 중앙정부-충청남도-15개 시군이 관리하는 농업데이터의 연결성이 미흡하여 상호 간 데이터 간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 존재
 -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수록된 정보가 다르며 상호 연계가 가능한, 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PK값이 없고 데이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다양한 결측값 존재하여 정확성 및 신뢰성에 한계 존재
 - 거주지 구분, 연령대, 지목 등 다양한 속성에서 결측치가 발견되었는데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소유정보의 경우 연령대가 10대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서 상세한 연령 구분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속성 중 면적에 대한 속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시설면적’ 등의 합이 공부상 면적과 같지 않은 농지 다수 존재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속성 중 등록번호를 통하여 경영주와 농지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외 경영주가 보유한 실제 농지 파악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속성 중 농업인 외 경영주는 경영주와의 관계 및 연령 등의 속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 외 경영주가 실제 경작하는 농지 위치 확인 불가

● 충남 정책지도의 정책과제

- 농업데이터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구축 필요, 데이터 기반의 농업경영체 실태, 농지현황 등을 직관적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분석결과가 정책의사결정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여 일부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지와 농업경영체 문제는 더 이상 행정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확인, 민간의 정책수요와 괴리되는 지점
- 농축산분야 데이터들의 허술한 관리 실태, 공간속성 정보까지 정비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여서 당초 분석 의도대로 충실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만큼 농축산분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현상들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 전담주체 구축 등 근본적인 데이터 체계화 개선 요구
- 정책지도 이후 후속 보완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로 연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연구원 내 연구관리와 연구체계로의 개선 필요
- 충청남도 농정분야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에 더 많은 기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낯설음이 존재하였던 점
-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가 데이터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각자 역할분담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면 시너지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은 협업체계 구축 필요

〈국내 문헌〉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9호 통권 36호, 충남연구원.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호 통권 35호, 충남연구원.
- 국토교통부(2022), 국가정보자원 개방·공유체계 구축 : 공간정보_컬럼정의서.
- 국토교통부(2022),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 김관수.이태호.안동환.조정찬(2020), 새로운 농업인 인식체계(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번호) 도입에 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시행 2022. 8. 1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39호, 2022. 8. 12.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2.07.), 민·관이 함께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 농식품부, 제1회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10.23.),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 : 10월 21일부터 113만 농업인에게 총 2조 1,943억 원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8.17.),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21.8.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 공포.
-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안내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 농지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 17370호, 2020. 6. 9. 제정].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데이터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9월 기준)
- 충남 1:5,000 연속 수치지형도 도로망 레이어(국토지리정보원)
- 충남 행정통계(통계청의 SGS 공간통계 서비스)
- 충청남도(2022.12.), 공익형 직불제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 충청남도(2022.12.), 농어민수당 지급내역(2021년 12월 기준)
- 충청남도의회(2022), 이공휘 의원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자료(농지대장 등, 2022년 6월 기준)
- 토지소유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2022년 7월 기준)
- 통계청(2021), 농가경제조사 : 농지임대차부문 - 임차농가 비율,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 (검색일자 : 2022.12.26.).
- 통계청(202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2022.12 기준」 (검색일자 : 2023.01.05.).
- 통계청(각연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서.
- 표준지공시지가 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2022년 7월 기준)

〈홈페이지〉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go.kr/>, 검색일자 : 2022.12.26.)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검색일자 : 2022.10.01.).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https://www.mafra.go.kr/home/524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NiUyRjQ4OTA5NCUyRmFydGNsVmllcy5kbyUzRg%3D%3D>, 검색일자 : 2022.12.23.)
- 농산어촌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누리집(RAISE,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검색일자 : 2022.12.28.)

충남 정책지도 2022-08 통권 35호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 시리즈 ①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배경 및 목적

- 젊은 농업인력 유치 및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관련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정보 창출과 이를 활용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미흡함
- 이에 농지, 농업경영체, 주요 농업 지원정책 등 3가지 요소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연속기획으로 다루고자 함
- 첫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별 특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 자료: 1. 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발데이터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2. 국토교통부 국가중점개발데이터 "표준지공시지가 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 주: 데이터 결속지는 분석에서 제외함

· 연구총괄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김마야 연구위원
 · 데이터 분석 :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최돈정 책임연구원, 손성규 연구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들어가며

배경 및 필요성

1. 왜 농지, 농민을 소환하게 되었는가?

1987년 개정된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경자유전)”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가 자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보전을 통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늘어나면서 2021년 임차농지 비중이 50%(통계청, 농가경제조사)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이 이미 많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자인 ‘농민’은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룸인 반면, 최소한의 농지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농업경영체’만이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나 농어민수당 등의 정책 대상자 자격기준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만이 가능하기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빈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적

2.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농업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와 농민은 현행 법과 제도 상에서 놓치고 있는 공백으로 인하여 부채지주 문제, 가짜 농업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지와 농업경영체 세부 실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느 지점에서 법과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내용

3.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 볼 것인가?

<시리즈 1> 충남의 농지 소유 공간 실태 분석 : 충남의 농지,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충남 내 시군별 농지분포, 소유주체별 현황, 연령대별 현황, 농지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리즈 2> 충남의 농업경영체 공간 실태 분석 : 충남의 농업경영체, 얼마나 고령화되어있고 어떤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충남 내 시군별 농업경영체 분포, 연령대별 현황, 지목별 현황, 재배작목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리즈 3> 충남의 농지, 사람, 정책 공간 실태 분석 : 충남의 농지, 사람, 정책지원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충남 내 농지 기반 위에서 실제 농사짓는 농업경영체를 연결시켜보고 공익형 직불제, 농어민수당 등 정책지원 대상과의 일치정도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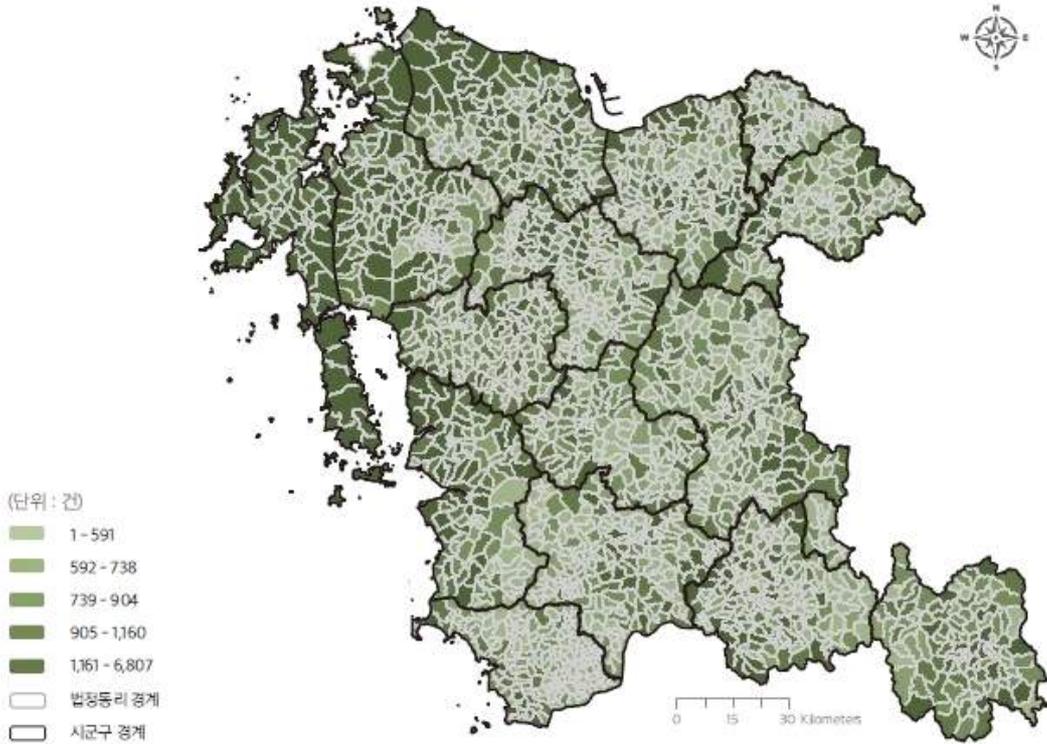
4.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농지와 농민은 농정설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로서 공간 실태 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농사지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01

충청남도 농지 분포

농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 답, 과수원 등인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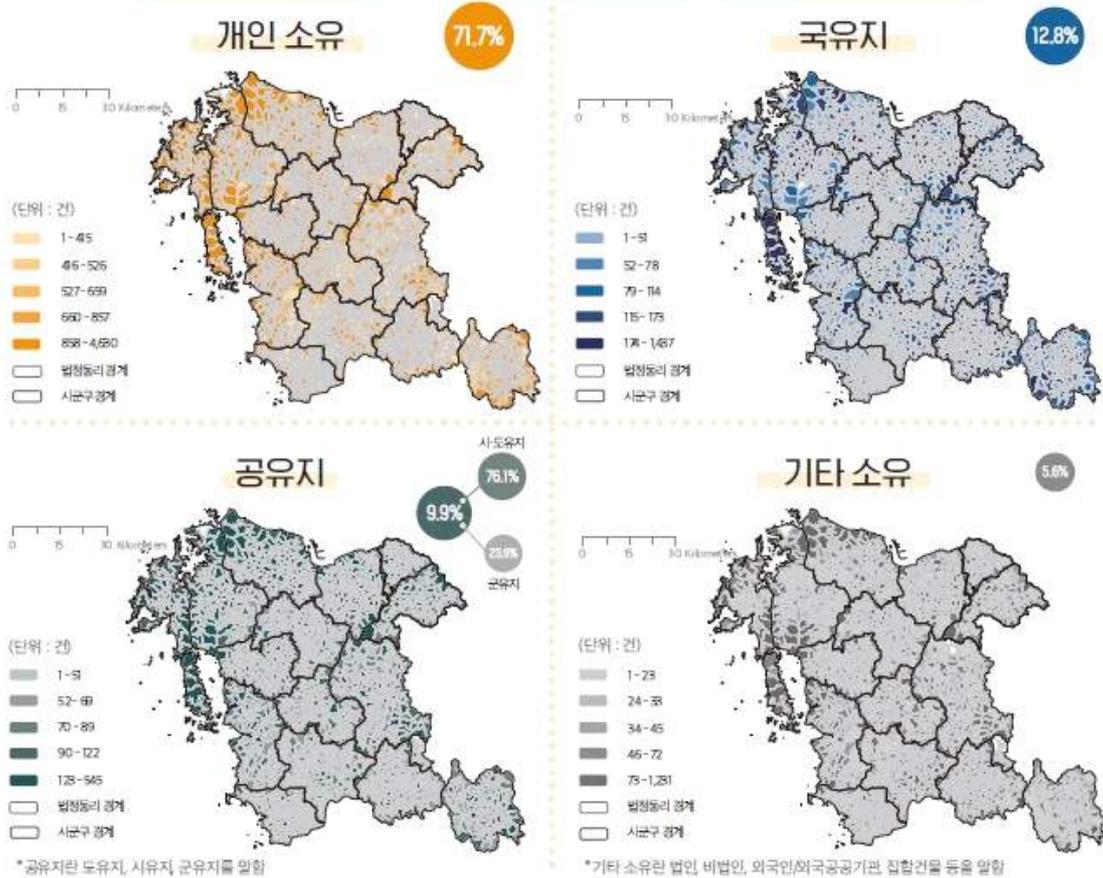
- 충청남도 전체 필지 수는 3,710,459건, 필지 면적은 8,223,555,048.2m(822,355.5ha) 이 중 농지 필지 수는 1,703,514건(45.9%), 농지 면적은 2,462,364,018.7m(246,236.4ha, 29.9%) 차지, 농지 1필지 당 면적은 1,445.5m(438평)
- 농지 필지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금산군(48.6%),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 농지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0.1%)
- 1필지 당 면적이 큰 곳은 당진시(1,770.8m², 536평), 서산시 태안군 부여군 순 1필지 당 면적이 작은 곳은 계룡시(1,094.4m², 331평),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순
- 필지 당 면적이 작은 지역은 농지 필지 수 비중과 농지 면적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이들 지역은 소규모 필지가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특징



*주: 필지란 땅에 대한 소유권 기준의 토지구획 경계로서 토지등록 기본단위이고 필지별 최소면적 기준은 없음, 논, 밭, 임야, 대지 등을 세는 단위로 '간'이라는 단위로 표시함

02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분포



- 충청남도 전체 필지 수 3,710,459건 중 개인 소유의 농지 필지 수는 1,221,321건으로서 전체의 33%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1703,514건 중 개인 소유의 농지 필지 수는 71.7%, 국유지 12.8%, 공유지 9.9%(사도유지 76.1%, 공유지 23.9%) 기타 5.6%
- 개인 소유와 공유 농지 필지 수는 당진시와 서산시에, 국유 농지 필지 수는 공주시와 아산시에, 기타 소유 농지 필지 수는 당진시와 천안시에 많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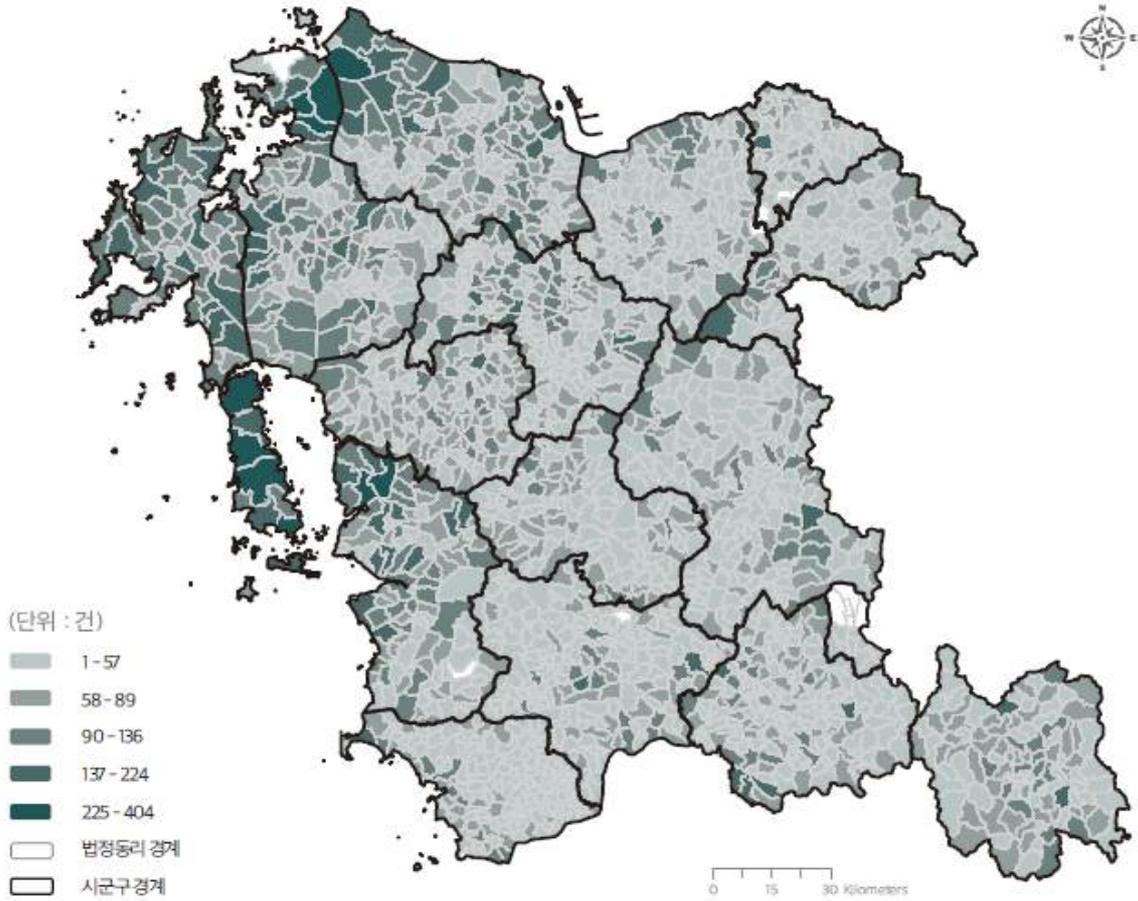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비율[%]



03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중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은 7.1%에 불과, 대부분 농지는 5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순이고, 낮은 지역은 계룡시, 아산시, 부여군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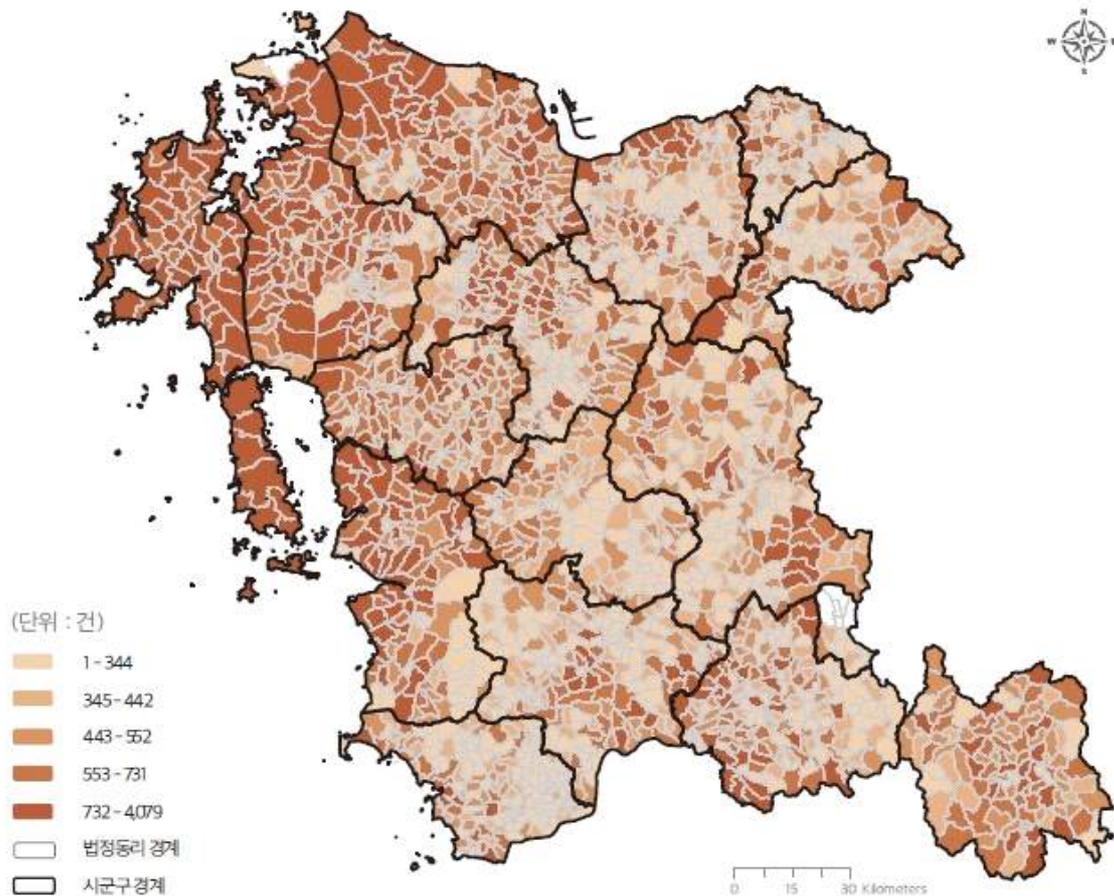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비율(%)



04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 충청남도 농지 필지 수 중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은 46.9%, 50대 미만 현황과 대조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 순이고, 낮은 지역은 계룡시, 청양군, 아산시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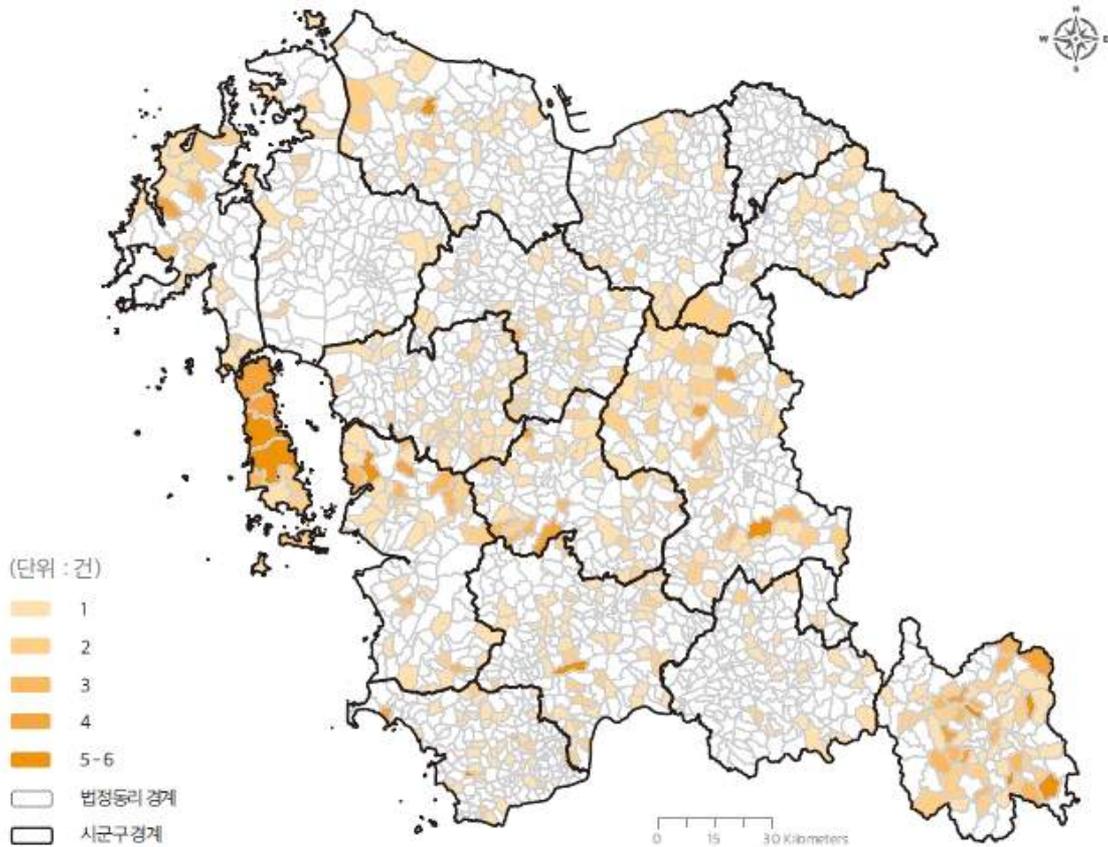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비율(%)



05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 충청남도의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개인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는 읍면동 기준, 금산군 125건, 공주시 91건, 부여군 65건 순으로 분포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필지 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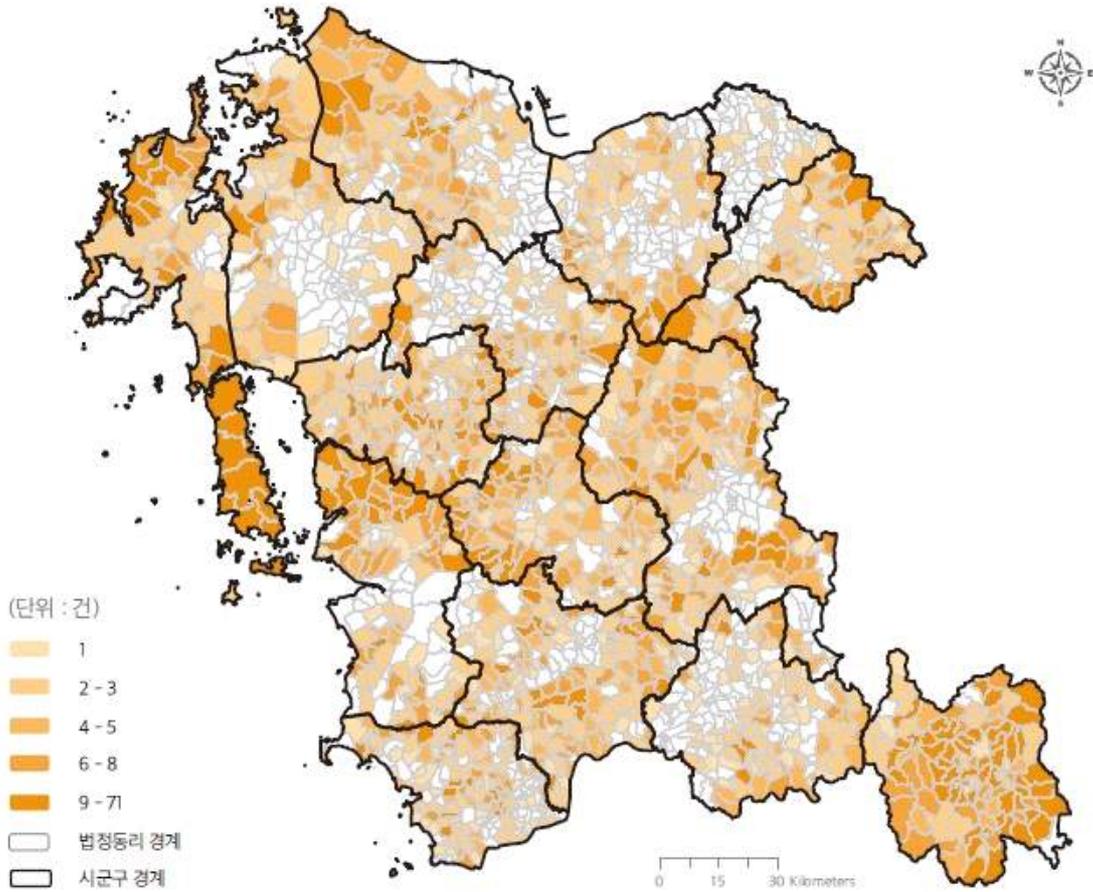
*주: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이하 동일함)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함축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06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 충청남도의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개인이 소유한 농지 필지 수는 읍면동 기준, 금산군 994건, 공주시 641건, 부여군 609건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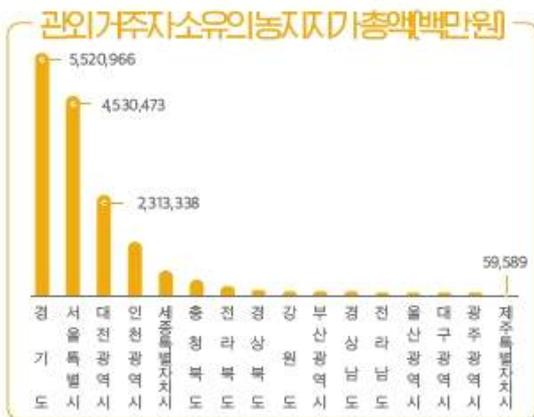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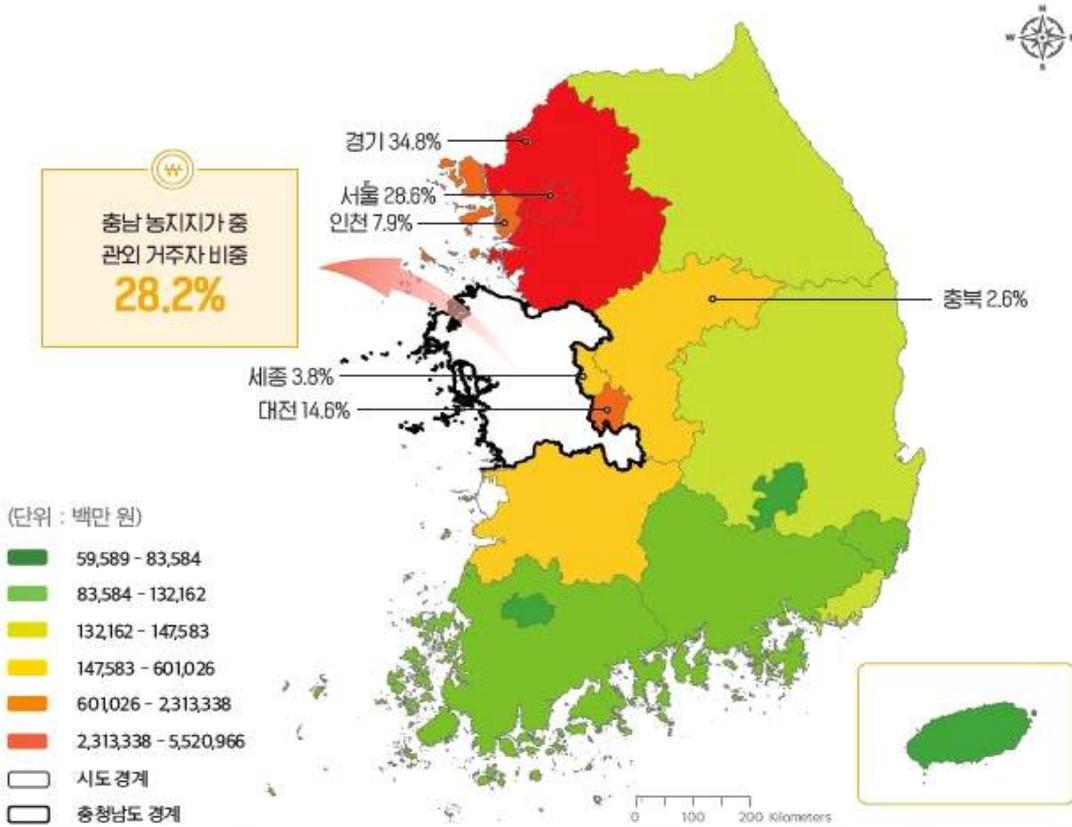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필지 수(건)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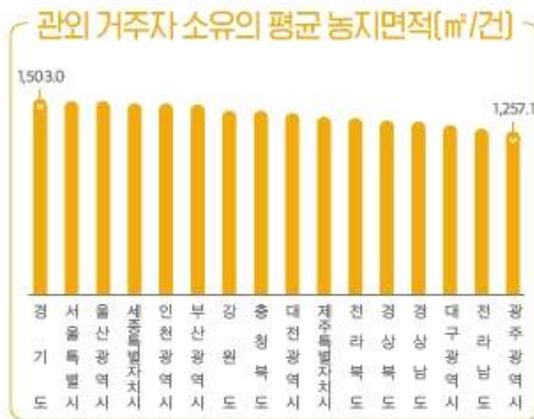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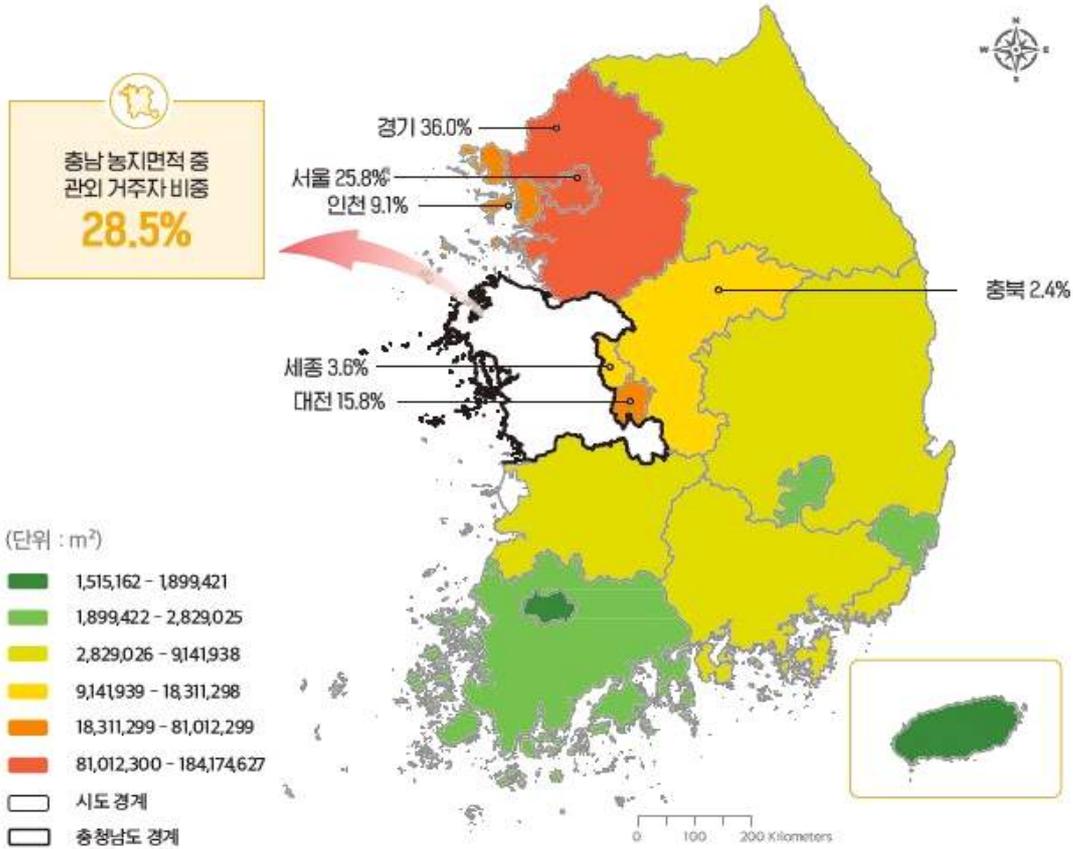
- 2022년 7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충청남도 농지지가 총액(결속치 24.3조 원 제외)은 56조 원, 농지면적당 평균 농지지가는 31,274.5원/건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지가 총액은 15.8조 원으로서 전체 총액의 28.2% 차지하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5.5조 원, 34.8%)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면적당 평균 농지지가는 30,947.3원/m²(만내 거주자는 314,053원/m²)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41,258.2원/m²)



*주: 1. 데이터 결속치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다를 수 있고 해석에 주의를 요함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농지 면적은 511,917,242m²(350,207건)이고 가장 넓은 지역은 경기도(184,174,627m², 122,537건)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청남도 평균 농지면적은 1,462m²/건이며 가장 넓은 지역은 경기도(1,503m²/건)



*주: 1. 데이터 결속치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다를 수 있고 해석에 주의를 요함

핵심 사항

민선 8기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중요 정책과제는 여성농민, 청년농민, 귀농·귀향 농민, 불법임대차 거래시장에 노출된 농민 등을 위해서 '농지' 기반 체계부터 제도화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려는 자정 노력을 통해서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① 국회에 농지관련 법률 제·개정 제안

-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높아가는 예외적인 소유조항(상속농지, 주말체험 농지, 이농농지 등)을 줄여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농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 개정
- 농지소유는 물론 농지이용, 농지보전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 2022.04.01.)」 제정
- 관외 소유자 중 가짜 농업인 및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차이에 대한 현실과 법률 간극 최소화,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필요

②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제안

- 분석에 사용된 정부 자료는 농지소유와 관련된 정보로서 충청남도 실제 농지 임대차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농지 임대차 및 농지전용 현황 등 세부 정보 공개 필요
- 국유 농지 및 공유 농지 이용실태 파악,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하거나 실습농장 제공 등 제도 개선
- 청년농업인에게 공공임대비축농지 대폭 확대, 농지수요(쌀 만한 농지, 접근성 좋은 농지 등)에 맞는 농지공급 체계 도입
- 고령농업인에게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농지로부터 점진적인 경영이양 유도

③ 충청남도 및 시군이 실천할 과제

- 충청남도 및 시군의 공유 농지 이용실태 파악,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하거나 실습농장 제공 등 제도 개선
- 관련 근거로서 충청남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개정 노력
- 마을 주민들이 (마을 농지)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구축, 실질적인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작동
- 이렇게 활용되는 공유 농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집단적인 환경친화적 농사방식 도입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실행

정책지도 시리즈 설명서

<시리즈> 충남의 농지 소유 공간 실태 분석 : 농지소유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라고 나와있다.
-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을 말한다. 「농지법」 제6조 예외적인 농지소유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 예외조항이 계속 늘어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시험지·연구지·실습지·중요생산지 등
3.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등...

<시리즈> 충남의 농업경영체 공간 실태 분석 : 농업경영체에 대한 이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데 농업인은 다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른다.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을 말하고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① 1천제곱미터(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실제로는 이 조건이 가장 중요, 이것만 인정)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시리즈> 충남의 농지, 사람, 정책 공간 실태 분석 :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수당에 대한 이해

구분	지원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농지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충남의 지원 실적 (2021)
공익형 직불제 (기본형)	· (면적직불금) 농지면적기준지급 · (소농직불금) 0.5ha 이하 소농에게 120만 원 지급	·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16~'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자	162,499명 (165,660ha) 3,480억 원
농어민 수당	· 농어민인 1인가구는 연80만원 ·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 45만 원 지급	·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하는 자(실제 농업에 종사)	159,846호 1,278억 원

*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2.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3. 충청남도의회(2022), 이공취 의원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자료(농지대장 등)

충남 정책지도 2022-09 통권 36호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 시리즈 ②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배경 및 목적

- 젊은 농업인력 유치 및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관련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정보 창출과 이를 활용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미흡함
- 이에 농지, 농업경영체, 주요 농업 지원 정책 등 3가지 요소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연속기획으로 다루고자 함
- 두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 농업경영체의 개별속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2022년 9월 집계기준)

* 주: 1. 데이터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첫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별 특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하였음

• 연구 총괄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감마야 연구위원
 • 데이터 분석 :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최문정 책임연구원, 손성규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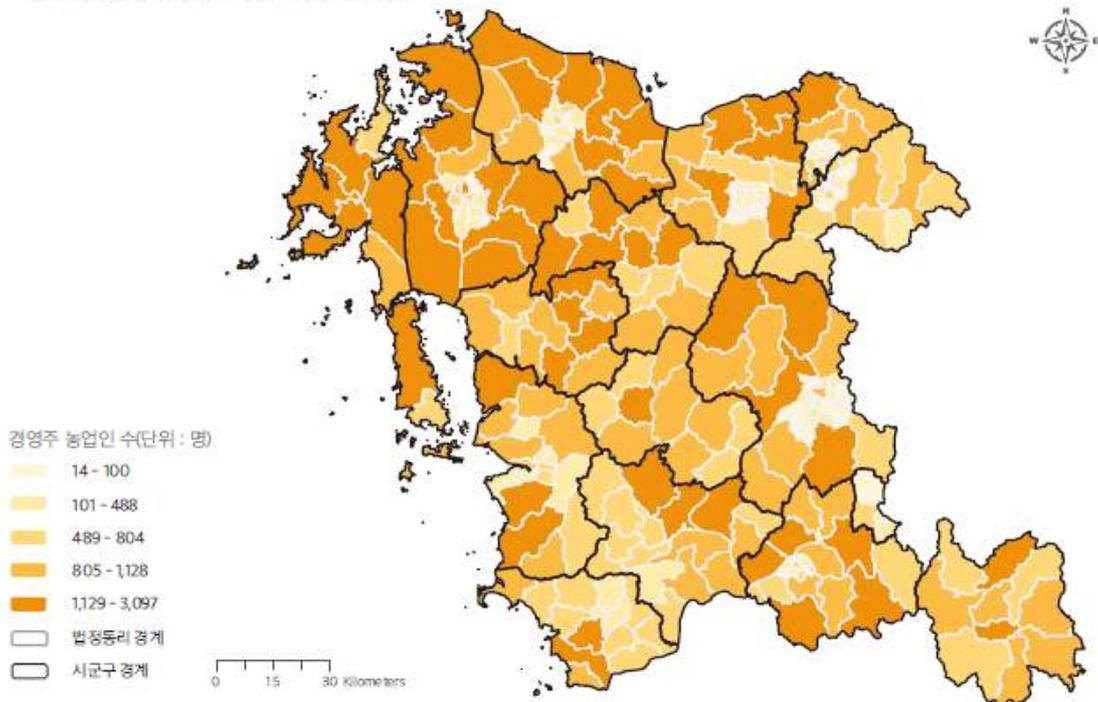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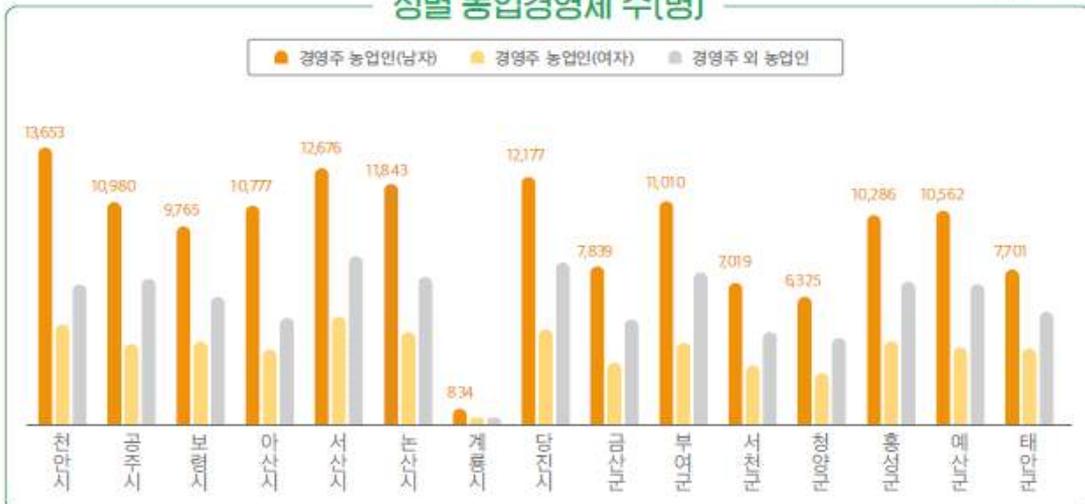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포

농업경영체란?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성되는데 경영주 외 농업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 고용인 등을 말함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199,983명, 이 중 남자 경영주는 143,447명(71.7%), 여자 경영주는 56,536명(28.3%)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91,023명, 이 중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는 9,978명에 불과
-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을 합하면 총 291,006명, 그러나 행정통계는 경영주 농업인 수치만을 집계함(충남인구는 2,119,257명, 2021년 기준)
-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이 가장 많은 시군은 천안시 18,633명(천안시 인구의 2.8% 차지), 서산시 18,071명(서산시 인구의 10.2%), 당진시 16,933명(당진시 인구의 10.1%)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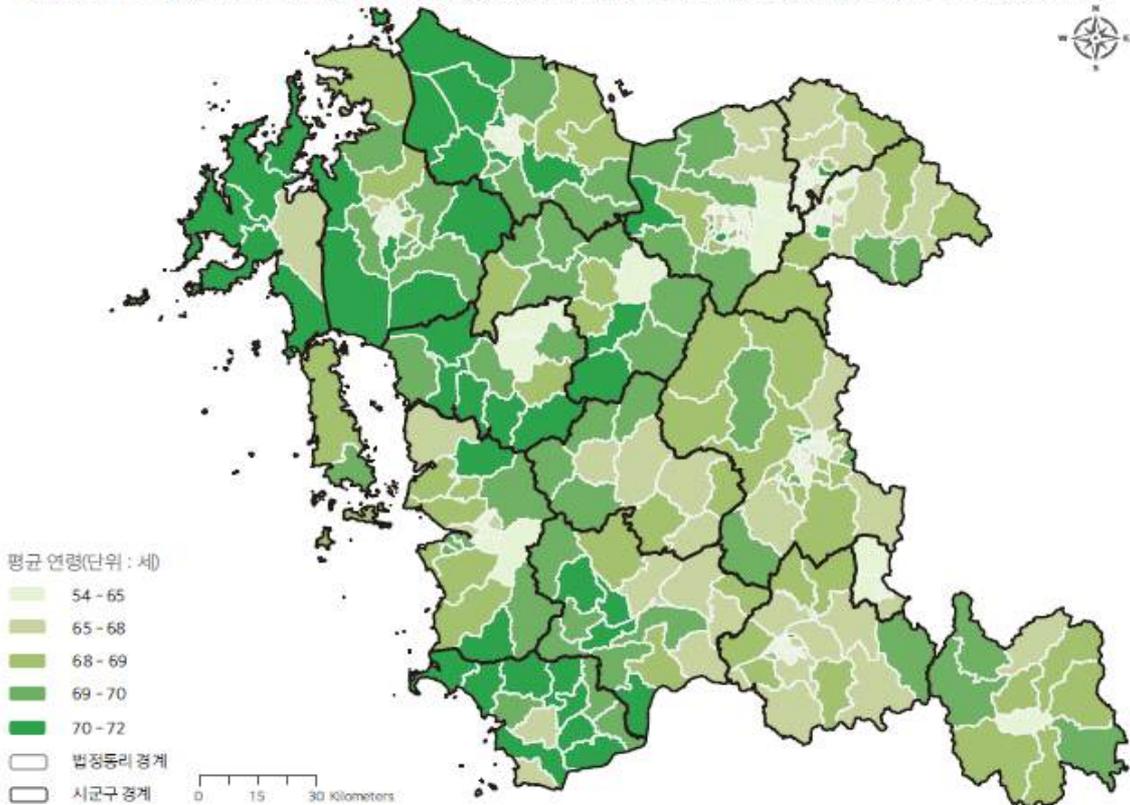
성별 농업경영체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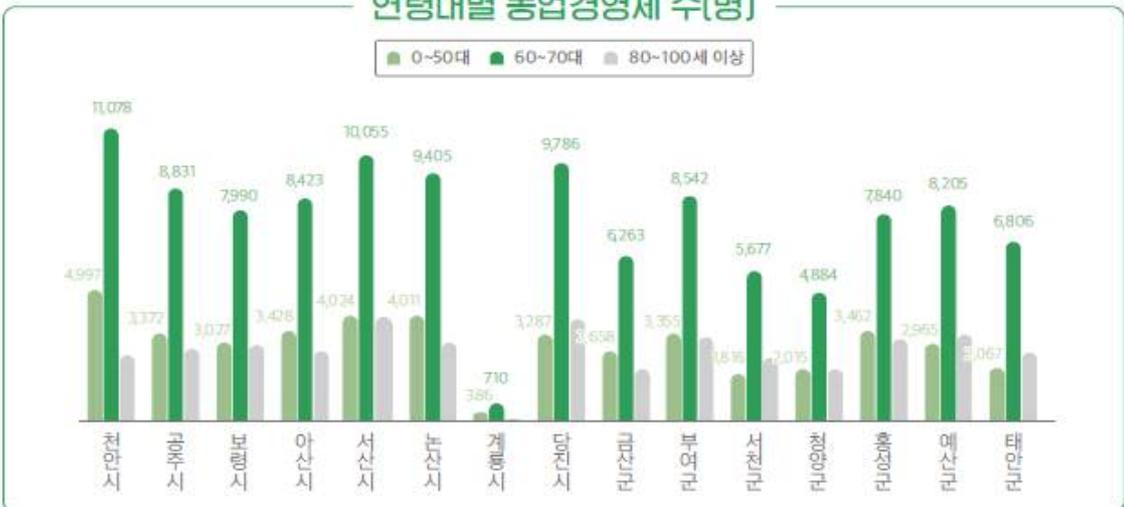
02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 199,983명)의 평균 연령은 68세. 이 중 50대 이하는 44,870명(22.4%), 60대~70대는 114,495명(57.3%), 80대 이상은 40,618명(20.3%)으로 파악
- 농업경영체 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50대 이하의 경우 천안시(4,997명), 60대~70대의 경우도 천안시(11,078명), 80대 이상의 경우는 서산시(3,992명)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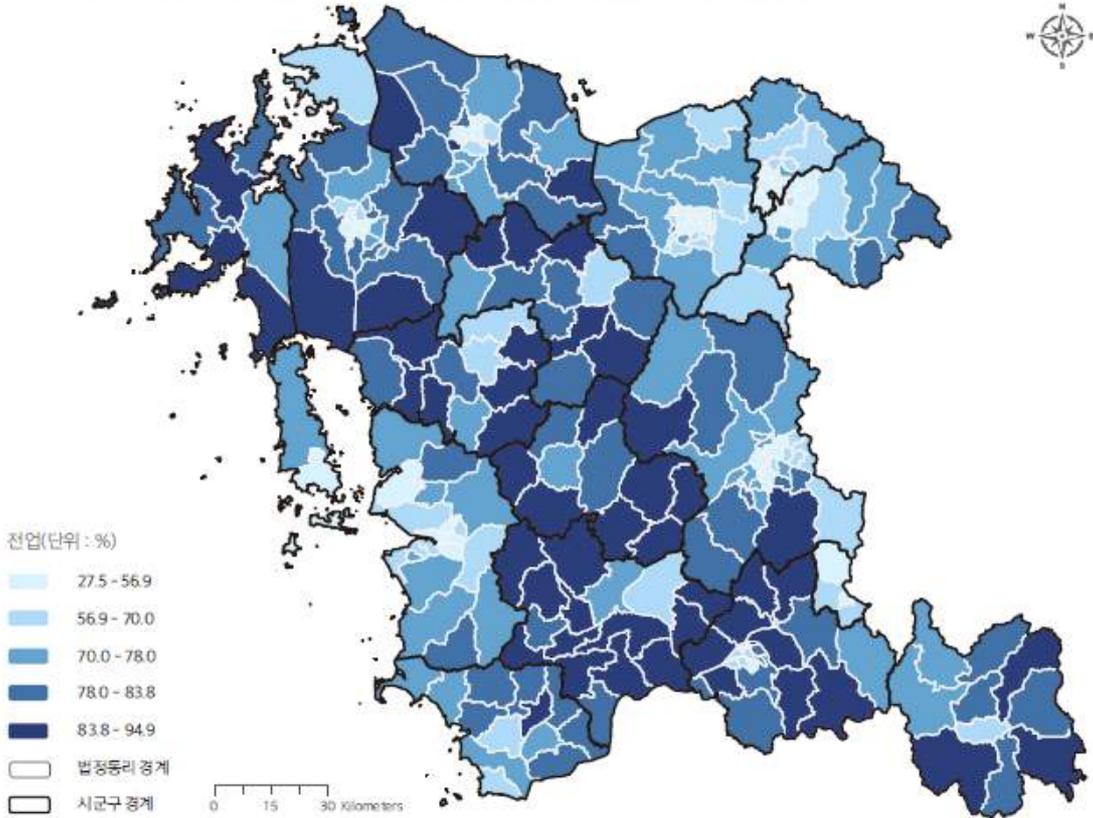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수(명)



03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 199,983명) 중 전업은 149,694명(74.9%), 겸업은 50,289명(25.1%)으로 파악
- 전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서산시(13,987명, 77.4%), 겸업이 가장 많은 천안시(7,507명, 40.3%)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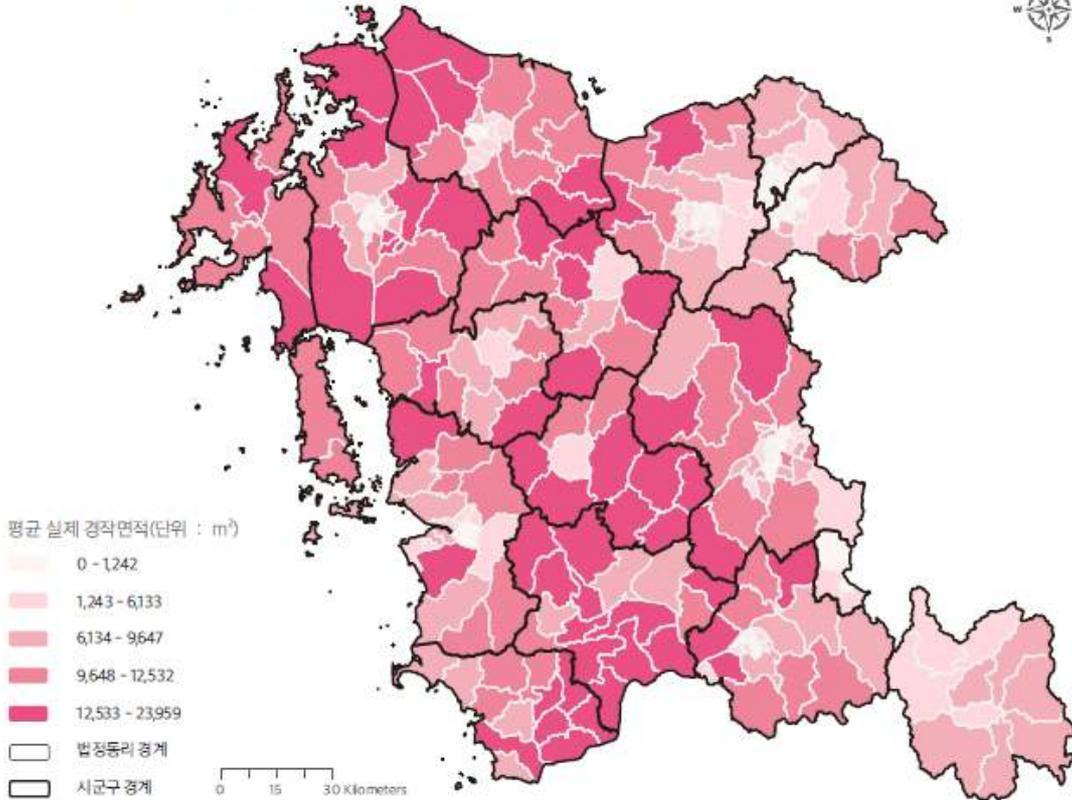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비율(%)



04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실제 경작면적은 총 1,957백만㎡,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은 9,790.3㎡(2,961.5평) 법정동 당 평균 경영주수는 702명
- 충청남도 경영주 당 실제 경작면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는 41.1%, 평균 이하인 경우는 58.9%인 것으로 파악
- 충청남도 평균 실제 경작면적보다 많은 시군은 서산시 12,917.3㎡, 청양군 11,958.5㎡, 부여군 11,722.3㎡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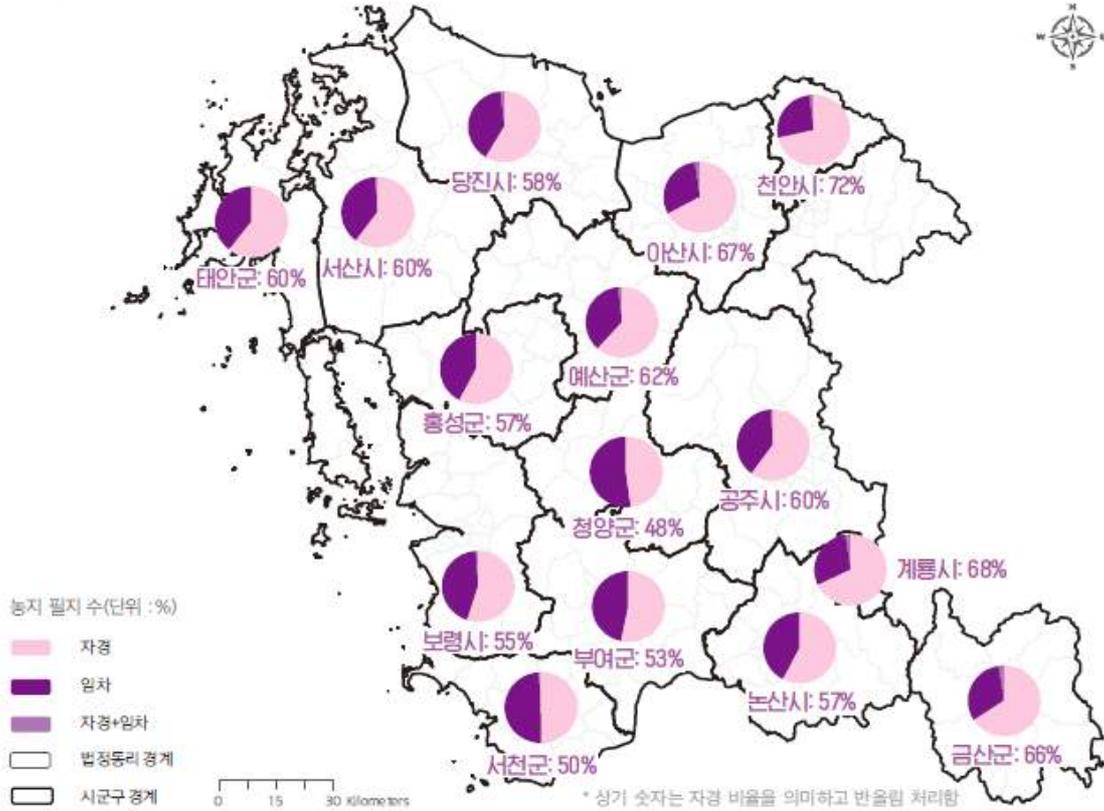
경지구모별 농업경영체 비율[%]



05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가 경작하는 농지 필지 수는 1,278,151건. 이 중 자경은 58.8%, 임차는 39.8%, 자경과 임차 혼합은 1.4%로 파악
- 자경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천안시(71.5%), 임차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청양군(51.6%)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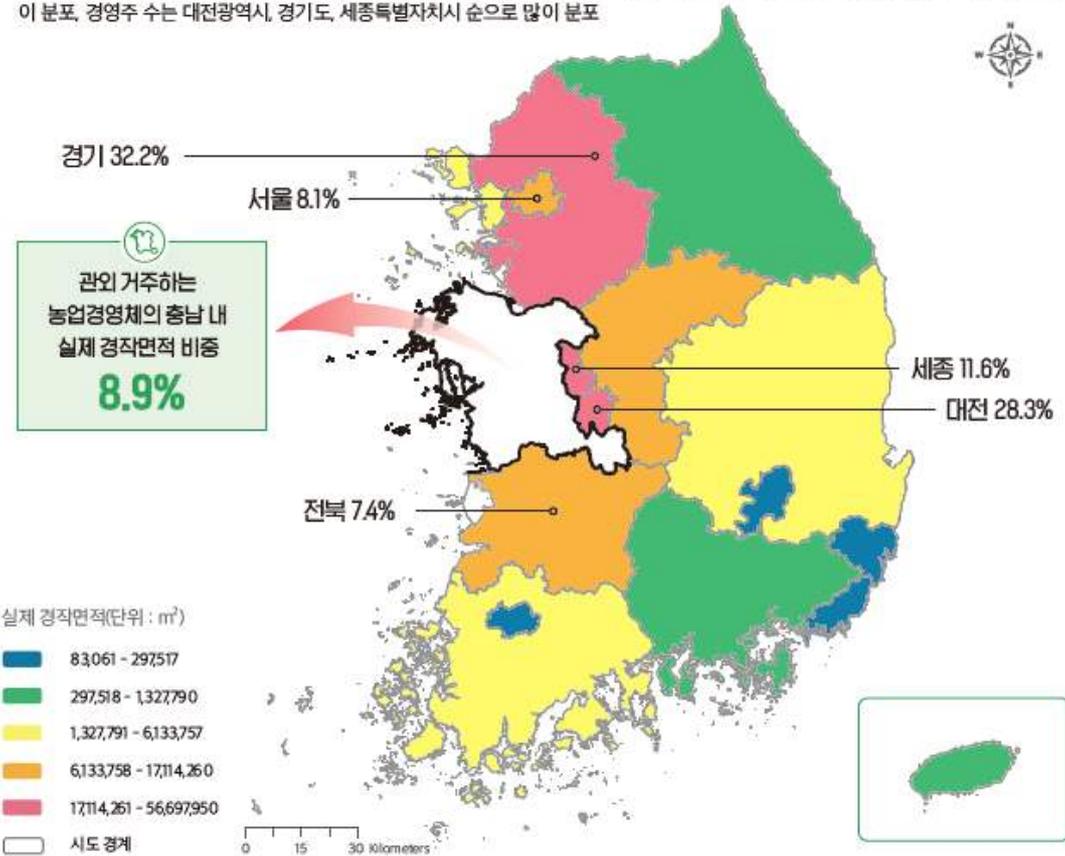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필지 수(건) 및 비율(%)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분포

- 충남에 농지를 두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는 21,292명, 이들의 농지 필지 수는 63,486건, 실제 경작면적은 총 173.3백만㎡,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은 8,138.1㎡(2,461.8평)
- 충남에 농지를 두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의 농지 필지 수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많이 분포, 경영주 수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많이 분포



상위 5개 지역의 관외 거주자 농지 필지 수(건) 및 경영주(명)



상위 5개 지역의 관외 거주자 자경 - 임차농지 필지 수 비율(%)



정책과제

농업경영체를 둘러싼 최근 이슈정리

- 농업경영체가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인정하는 수단이 부재한 것에 대한 논란
- 일정 농지면적만 확보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가짜 농업인 양산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농지만 인정되는 것은 임차비중이 높은 현실과 배치되는 문제
- 대부분 농정 보조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만을 중요한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여 누락되고 배제되는 계층 발생(예, 여성농민 청년농민, 불법임대차 거래에 노출된 농민 등)
-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은 무급종사자로 인식되어 법적·제도적 지위보장이 취약한 구조
- 농업경영체, 농가인구, 농업인, 농민 등 통계수치 차이, 모호한 개념에 따른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

- ①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중화 제도 개선**
 - 농업경영체 중 남성 경영주의 편중화(남자 경영주 71.7%, 여자 경영주 28.3%), 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이면 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만 농업경영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제도 개선 필요
- ② **연령에 맞는 농업경영체 지원 차등화 정책과제 필요**
 - 농업경영체가 고령화(충남 경영주 평균연령 68세)됨에 따라서 연령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차등화하는 정책과제 필요
- ③ **전업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전망 확충 정책과제 필요**
 - 농업소득(충남 평균 농업소득 1,400만 원 수준, 202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업농 못지않게 겸업농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실행 필요
- ④ **농지 임대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필요**
 - 지역별 농업경영체 고령화도 자경과 임차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농업경영체의 연령별 임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층에는 농사지를 땅을 제공하는 정책과제, 은퇴층에는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정책과제 필요
- ⑤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실제 경작인증 정책과제 필요**
 - 관외 거주하는 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면적 비중은 약 8.9%로서 주로 대도시인 경기, 대전, 세종 등에 거주하고 임차보다 자경 비율이 높는데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인정하는 충남만의 정책실행 필요

농업경영체 개념에 대한 기초이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데 농업인은 다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른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을 말하고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실제로는 이 조건이 가장 중요, 이것만 인정)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서면자문 개요〉

- 자문목적
 - 정책지도 시리즈 1과 시리즈 2의 해석과 시사점, 시리즈 3 발간을 위한 조언
 - 농지, 농업경영체, 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 등을 연계한 분석, 공간분포 해석 등
- 자문기간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12월 26일 월요일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의견서 작성, 이메일 회신
- 자문장소 : 서면자문 중심인 관계로 장소 불필요
- 자문대상 :
 - 유찬희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 연구위원)
 - 전량배 부회장((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서산시 OO마을이장)
 - 조병옥 의장(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 함안군 OO마을이장, OO면 농지위원회 위원)
- 자문내용 :
 - 정책지도 시리즈1(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에 대한 검토의견
 - 정책지도 시리즈2(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에 대한 검토의견
 - 정책지도 시리즈3(충남 농업 지원정책의 공간 분포, 2023년 상반기 발간 예정)에 대한 자문의견
 - 기타 자율의견

1. 정책지도 시리즈1(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에 대한 검토의견

- (표지) 배경 및 목적 중 첫 번째 내용(젊은 농업 인력 유치 및 ~)이 실제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 (2쪽,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분포) 개인 소유 농지는 북서부 및 서부(당진, 서산, 태안, 보령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 3~4쪽의 50대 미만/60대 이상 소유자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필지 수 * 소유자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필지별 규모 * 소유자 연령대를 기준으로 삼아 지도에 뿌려주면 보다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다만 기준이 복잡해져 지도에서 가독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표지의 젊은 농업 인력 유치라는 방향성에 맞춘다면 연령대 중 39세 이하를 따로 분리하여 표시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표본 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농지를 주로 소유한 지역을 보여주고 이 분포와 60대 이상(보다 구체적으로 70~80대 이상)이 농지를 보유한 지역 분포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 두 부류가 겹치는 지역이 농지 또는 영농 승계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7~8쪽) 관외 거주자가 충남 지역에 보유한 농지면적 및 평가액 비중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 서울 및 경기권에서 보유한 농지면적 비중(61.8%)과 평가액 비중(63.4%)을 단순 비교해 보면, 해당 지역 관외 거주자가 충남 농지 중 '알짜배기'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두 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충남 지역 농지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 거리(접근성) 측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충남 지역 농지는 자경(예: 주말 영농)인지 아니면 임차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려 시도할 만합니다.
 - 또는 관외 거주자가 보유한 농지가 충남 내 농지가 밀집된 지역(서북부 또는 서부)인지 아니면 영농 여건 불리 지역인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면 향후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고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자유전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원칙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과거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는 더 많이 논의해야 합니다(이 내용은 연구

범위를 벗어납니다).

- 필자께서는 경자유전 원칙 유지 및 강화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위의 논의와 맞물려 쟁점이 여럿 있다고 봅니다.
- 가령 농지법 개정을 거치면서 2022년 8월부터 농지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임대차가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 역시 그동안 경실련, 전농 등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방향은 옳지만 소요 예산 및 투입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농지 소유 주체별 비중을 보면 50대 미만 소유농지 비중이 7.1%, 60대 이상 소유농지 비중 46.95%로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 이는 젊을수록 농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과 함께 연로한 분들이 소유한 농지는 상속 및 이농 등으로 부재지주의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15년 후가 되면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는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을 손보는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총량제에 대한 검토, 농지 이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관외거주자 소유 충남농지면적이 51,190ha에 비중은 28.5% 정도로 나옵니다. 이중 서울 경기권 비중이 71% 정도입니다.

- 상속인들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민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 예도 많을 것입니다. 2021년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구입한 세종시의 농지 또한 위의 경우에 포함될 것입니다.
- 이처럼 관외거주자의 농지소유 문제는 가짜농민이 되어 각종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런 위법과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서 마련된 정보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의 농지에 대한 정보를 새로이 구축하여 제대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년 농업인 농지 공급 체계 도입, 고령 농업인의 점진적 경영 이양 유도 등은 치밀하게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맞추어 앞에서 제안 드린 청년-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 분포 등을 비교하는 작업

을 수행하면 기초 자료로 쓸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기초자료, 기초기반에 대한 정비 선행

- 기반정비(경지정리가 된 논처럼)가 된 농지의 경우엔 현황과 지번, 지적 등이 대체로 맞지만 기반정비가 안된 농지의 경우 대체로 안 맞는데 이것부터 제대로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과거 일제 강점기 지적도에 기초한 다양한 지적불일치 농지, 도로, 하천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밭 기반정비 등 농지정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농지를 접, 답, 과수원, 목초지, 시설 등 농지로 구분해서 자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10년 주기별 분석(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과 추적관찰 필요, 충남 및 시군의 변화 추이 분석

- 충남 및 각 시군의 농지면적과 농민수 변화 추이 분석
- 소유 주체 변화 추이 분석
- 소유 연령층 변화 추이 분석
- 충남 및 시군의 시설재배 변화 추이 분석
- 관외거주자(시군에서 볼 때 타시군, 충남도에서 볼 때 타 광역지자체) 변화 추이 분석
- 주말/체험 영농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되는 농지, 이농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변화 추이 분석

2. 정책지도 시리즈2(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에 대한 검토의견

- 시리즈 1, 2번의 자료 출처가 다른데 두 원자료를 받아서 연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절차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 개방 데이터는 원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두 출처의 원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농지 관점에서 이용자 분포를 보는 분석과 이용자 개인이 어느 땅을 쓰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논의를 풀어갈 수 있고 정책 시사점도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지금과 같은 인포그래픽 형태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 (3쪽) 전·겸업 정의를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서는 전업을 “농업에만 종사하고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영체”로, 겸업을 “농업 이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 이는 통계청 등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업 경영체로 신고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 겸업 농업경영체는 청년 농업인이거나 관외지주이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업농은 겸업농보다 영농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의사가 강한 편이고, 임차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 이런 점에서 3쪽의 분포는 5쪽의 임대차별 농지 분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의가 대단히 막연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 (5쪽) 자경+임차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 통계청 농지임대차 조사 등과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 자료의 공신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6쪽) 관외 거주자(농업경영체)가 충남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면적 비중은 8.9%에 불과합니다.
 - 시리즈 1에서 보여준 ‘충남 농지면적 중 관외 거주자 비중’ 28.5%와 차이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 시리즈 1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 거주 농업경영체 비중이 높는데, 이들의 자경 비율이 77.1~83.4%에 이른다는 점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0년 주기별 분석(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과 추적관찰 필요, 충남 및 시군의 변화 추이 분석

- 본 보고서는 2022년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10년 자료 등을 통해 변화 추이를 분석, 이를 통해 시사점 찾아내서 정책 방향을 잡는 도구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 최소한 10년간의 충남 및 각 시군의 농민, 농가,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 분석
-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지변화(농지 필지 수 및 면적) 추이 분석
- 농업경영체의 소득 변화 추이 분석(예를 들면, 농업경영체의 농업소득(소유 및 임대 농지에 기반한 소득)과 농업외 소득(임노동-농업 임노동과 농업외 임노동), 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농업경영체 경영구조를 파악할 수 자료, 연령대별·시군별 분석,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추가 자료 분석 가능성 제기

- 직불금이나 농민수당등의 지급에 따른 경영체 쪼개기 및 가짜 농민의 농업경영체 만들기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료 추출 필요합니다.
- 농업경영체가 유지되기 위한 비용을 산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분기점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순히 경영체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농업경영체가 소규모라도 소득은 편차가 클 수 있음, 시설 유무, 작물의 환금성 차이 등)되나 각 농업경영체 형태(면적, 시설, 작물등)에 따른 기본 자료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각종 재해의 영향이 없고, 일정정도 생산물에 대한 가격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 전업 및 겸업경영체로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도개선 도출

- 현재 농업경영체의 문제는 이미 다양하게 노출되어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이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농업경영체 허수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 농가수가 103만(21년) 가구 정도로 통계되지만, 농업경영체 수는 현재 176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다양한 내용을 함의한다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큰 도시일수록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 농가 대비 농업경영체 수가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서 다양한 불합리와 위법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충남의 경우 관외 경영체 수가 21,29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수입입니다.
- 이처럼 농업경영체 제도는 진짜 농민과 가짜 농민이 바뀌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기에 현장 실사에서 그 제도적 불완전성을 메꿔 나가야 합니다.
- 그것은 현재의 농지위원회를 성격과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여 농지 문제의 올바른 제도적 정착과 동시에 농업경영체 문제에 대해서도 실사할 권한을 주어 가짜 농민이 진짜 농민이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정책지도 시리즈3(충남 농업 지원정책의 공간 분포, 2023년 상반기 발간 예정)에 대한 자문의견

- 공익직불금 또는 농민수당을 받은 필지 정보와 시리즈 1의 소유자 정보를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 특정 필지 소유 주체인데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 조건을 노리는 관외지주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반대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비공식 임대차 관계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료입니다.
 - 구체적으로 1) 국토교통부 원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 2)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 실적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둘 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직불금과 농민수당 모두 경영체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라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기 쉬울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급 실적(이것도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과 농지 소유 주체 분포를 비교하고, 이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직불금 수령에서도 나타나리라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시리즈 2에서 “연령에 맞는 농업경영체 지원 차등화 정책 과제 필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을 해봅니다.
 - (분석을 더 해봐야 하지만) 충남 고령 농업인(농업경영체) 중 상당수는 소농 직불금(120만 원/년)을 받을 것입니다. 충남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 특정 연령(예: 70세, 75세 등)이 되면 기본직불제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최근 논의되는 경영이양직불제(은퇴 직불제)로 ‘갈아타는’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 즉, 일정 연령 이상에 다다른 고령 농업인이 지역 청년 농업인이나 제3자에게 영농 승계를 하는 대신 은퇴 직불금 + (도 차원의)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영국에서 올해 시행했던 lump sum exit scheme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농민에 대한 정의가 우선 확립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가짜 농민을 가려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등록된 경영체를 바로잡고,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경영체로 등록안된 농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10년 주기별 분석(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과 추적관찰 필요, 충남 및 시군의 변화 추이 분석
 - 직불금이 생겨난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농민) 변화 추이 분석
 - 농업경영체가 생겨난 후 농업경영체 변화 추이 분석
 - 농민수당이 생겨난 후 농민수당을 수령한 농가(농민) 변화 추이 분석

● 추가 자료 분석 가능성 제기

- 농어민수당 및 공익직불금등의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파악, 연령대 별·영농규모별·영농형태별 비중 분석 필요합니다.
- 충남의 농어민수당 및 공익직불금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계층의 농업경영체에 집중되고 있는지, 누락되는 계층은 어느 지점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 그렇게 된다면, 현재 충청남도나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만으로도 누락되는 계층을 발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여성농민, 농지가 없이 농사짓는 농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못하는 농민, 청년농민 등 말입니다.
-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4. 기타 자유키론

- 고령영세농에 대한 구분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 영세농으로 과거 농업 현장에서 농업농촌인력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농업노동자)
 - 자식에게 농지를 증여/상속하고 잔여농지가 남아있는 경우
 -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잔여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귀농, 귀촌 후 늙어간 경우(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

- 5-60년대생의 귀농, 귀촌, 귀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농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이상없는가?
 - 이들이 핵심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인데 이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촌현장에 있다하여 모두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들에 대한 구분설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 지금 농업농촌에서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 안정적인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 농촌인력문제 - 일할 사람의 문제 - 언제까지 외국인 농업노동자에게 우리 농업을 맡길 수 있을까?
 - 젊은 청년 및 일정연령이하의 귀농·귀촌·귀향하는 이들에게 우선 시작을 영세 농업노동자로 시작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 이들을 농민으로 일정규모의 자기영농을 하면서 농업노동자 영농작업단으로 묶을 수는 없을까?
 - 읍면동마다 꾸리고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농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 이 자료만으로 정책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최소 10년 정도는 변화추이를 뽑고 분석한 것에 기초해 현재 모습을 분석해야 합니다.
 - 미래에 대한 목표, 시기별 과제를 내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그리고 국가농정과 지방농정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지 않을까 합니다.

- 기타 지도표시 부분 수정
 - 천안시를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눠었는데 충남이 15개 시군이 아니라 16개 시군으로 보이므로 구단위 구분하지 말고 한개 시군으로만 구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